



이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정밀한 논리적 관계에서 배어나는 설득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다른 사실과 칼럼들 - 동아일보의 <누가 '보'고 누가 '혁'인가?>(12/29 일자), 한겨레의 <이제 베트남전을 생각할 때>(12/ 일자)와 <반체제 죄와 벌>(12/12 일자) - 도 최고 사실로 추천되었으나 그 의의나 혁신성 그리고 사실이 갖춰야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향신문의 사실이 보다 앞서갔다. 동아일보는 정치성을 띠는 점에서 경향신문에 비하여 공정성이 떨어졌고 주제의 비중이나 참신성도 열등한 편이었다. 한겨레의 사실과 칼럼은 좋은 주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캠페인성이 짙고 지난 8월 이후 계속 선정된 점을 감안하였다.

최악사실



중앙일보 12월 15일자 <폭언,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조선일보 12월 15일자 <정말 '짜가지 없는' 세상>

세계일보 12월 13일자 <폭력시위 추방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신문사실, 막가는 언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99년 12월 최악사실로는 12월 15일자 중앙일보의 [폭언·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비롯하여 같은 일자의 조선일보[정말 '짜가지 없는' 세상], 12월 13일자 세계일보의 [폭언사회]방치할 수 없다]가 뽑혔다. 한 사실로 좁히지 못한 이유는 이들 사실 모두가 같은 내용의 문제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최종 선정을 위한 차별화된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 모두 최악사실로 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2월 일간지들이 보여준 일련의 '노동자 죽이기'태도를 비판하고 그 대표적 사실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의 사실을 이 달(12월)의 최악 사실로 선정하였다.

민주노총의 강 특검 항의방문과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의 폭언을 같이 논평한 조선, 중앙의 경우 발생배경이 다른 두 사안을 한데 묶어 비판하는 '도매급 비판'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노총이 항의방문도중 발생한 폭언만을 떼어 보도한 것은 94년의 '불바다' 발언보도와 유사하다.

일명 '불바다 발언'은 94년 3월 19일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된 남북 특사 교환 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했고 언론은 매우 흥분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언론의 태도는 "남북 관계 전반이나 특사 교환 실무 접촉의 전후사정, 특히 당일 오고간 대화 내용을 거두절미한 채 어느 한 대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은 편향 보도의 전형적인 사례"(언론노보 94/3/26일자)로 비판받았다.

이번 민주노총의 항의에 대해서도 언론은 항의과정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폭언 자체만을 비판하고 나

섰다.

군이 폭언을 한 민주노총 관계자와 강특검 각각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치 않더라도 폭언을 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벌어진 파업·해고사태와 각종 공사를 비롯해 노동계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항의방문에 대한 내용보도보다 일부분인 폭언을 과장·확대 보도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사실을 먼저 보자.

[폭언·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세상이 이렇게 막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말로 첫 문장을 시작해서 국의원과 민주노총의 폭언을 비판했다. "개인은 물론이고 온갖 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폭력적인 수단에 호소하려 든다"는 내용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대한 특별검사의 미진한 수사가 노동계의 분노를 얼마나 자극했음지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쉽게' 폭언한 것처럼 기술했다. 이어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표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걸핏하면 폭력시위로 나아가는 이익단체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깊은 혐오감을 안겨준다. 며칠전 민중대회의 폭력시위도 같은 맥락의 집단폭력행위다"라며 민중대회 당시의 폭력사태를 비판했다. 물론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물리력을 행사한 시위대의 과오가 있었지만 실제 부상자를 낸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었다는 사실에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언론이 그동안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수많은 불상사가 발생해도 이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또 공권력의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IMF 이후 보다 심화된 빈곤층의 울분이 담긴 민중대회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기보다는 폭력시위 현상만을 몰아치듯 비판을 가했다. 이 사실은 "또 이들은 걸핏하면 '낙선운동'이니 '정권퇴진운동'이니를 벌이겠다는 협박성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단순한 언어폭력수준을 넘는 정치적 협박 수준이다."라며 비판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이처럼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른 사안을 묶어 한꺼번에 비판하는 태도는 의도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린 게 아

니었다. 이처럼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른 사안을 묶어 한꺼번에 비판하는 태도는 의도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린 게 아

社 説

정말 '짜가지 없는' 세상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김원일(姜源一) 특별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 특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의 남성위원이 야당 여성의원에게 "짜가지 없는 x" 운운하며 몰아붙인 사건이 같은 날 발생했다. 가뜩이나 여수선한 세대에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막가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의 통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폭언·욕설을 퍼부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국회위원에게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의식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목의 상실을 본다. 우리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이 사회를 '강제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강 특검에게 민주노총의 항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강 특검의 말을 받아 내도 부위원장은 "야, x x x 아, 네가 무슨 특별검사냐. (너는) 보통검사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하겠다", "이런 농담은 할 필요도 없잖아"라며 길길이 뛰었고, 함께 있던 양도 부위원장은 "당신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겠다"며 욕박질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항의하려 한 것도 상례에서 벗어난 일이지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독립 수사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언행으로 위력을 가하려 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순수성과 근로자들의 진정한 정신상태를 대신하는 행위이며, 전 노동계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동이기도 하다. 전 노동계가 본게때 마지않아야 할 말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회 국창근 의원이 김명선 의원에게 한 폭언은 그 사실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일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저질언행이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나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 의원이 위원장에게 사대질을 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일어서자, "짜가지없는 x이, 밋 여봐야 정신을 차리지. 파귀 서너 대는 맞아 야 돼"라며 달려가 때리려는 사정까지 했다는 것이다. 폭력배들도 이쯤 되면 쫓겨나야 할 사태다. 이것은 여성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태다. 민주노총 간부들과 국 의원이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하겠다.

나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낙선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을 추진하는 시민·계야단체와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가부채 해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도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란 말인가. 또 낙선운동과 정권퇴진운동을 '정치적 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중앙일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의 '당선운동'을 한 것은 언론의 자유고, 시민단체가 문제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협박이란 말인가.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 대한 무조건적 낙선운동을 하는 것과 시민단체가 지역감정조장, 색깔론 선동 등 분명하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어느 신문보다 시민운동에 대한 기획 기사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는 중앙일보가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를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는 무지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선일보의 [정말 '짜가지 없는' 세상] 역시 중앙일보처럼 민주노총과 국회의원 두 사안을 묶어 처리했다. 조선은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 윤리적 책임의식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의 상실을 본다"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언제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사회지도층으로 대접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조선일보는 또 폭언행위가 "노동운동의 순수성과 근로자들의 건전한 정신상태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전 노동계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동"이라고 적고 있다. 이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 조선일보 지면에서 노동운동이 순수하게, 근로자들이 건전한 정신상태를 가진 것으로, 노동계에 권위와 위신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 적은 있었는가. 결국 노동계를 더욱 강도높게 비판하기 위한 것에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또 "전 노동계가 분개해 마지않아야 할 일"이라고 했으나 정작 전 노동계가 분개해 마지 않을 일은 파업유도를 한 국가기관과 거기에 일조한 언론의 책임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짜 반성해야 한다.

한편 민중대회의 시위만을 비판한 세계일보의 12월 12일자 [폭력시위 추방을]은 세계일보 논설진의 시대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했다. 지난 12월 10일에 열렸던 농민대회중심의 2차 민중대회와 관련 이 사실은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폭력시위는 외국인들에게 투자기피를 초래하는 등 결국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외환위기의 본질을 무시한 언어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벌의 무리한 확장경영과 세계 환투기세력의 투기가 외환위기의 핵심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세계일보가 비판하는 이날의 폭력시위는 외환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과 울분이 담긴 시위였다.

이 사실은 "폭력시위의 조절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존전략의 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21세기 생존전략으로 폭력시위를 풀어야 할만큼 주요과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

이밖에 최악의 사실은 아니지만 조선일보의 <정치에 뛰어드는 노-사>(12/6일자)와 대한매일의 <국민회의, 국정 주도해야>(12/25일자), 동아일보 12월 4일자 어경택 칼럼 <대통령부인이 입은 옷은?>이 후보로 올랐다.

조선일보 12월 6일자 [정치에 뛰어드는 노-사]는 재계의 정치활동선언으로 이익집단들이 정치참여격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증폭시킬 개연성을 높였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재계의 정치참여를 공식화하고, 불가피성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정치참여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노동계의 정치공세때문이라고 정당화해주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노사간의 문제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만이 아닌데도 이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남았으며 정치인의 인기주의공세라는 이유로 논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반노동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한매일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구여권에서 신여권이란 주어진 달라졌을 뿐 여당지를 자처하는 보도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은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2월25일자 사실 [국민회의, 국정 주도해야]를 비롯한 많은 사실은 대한매일이 대중신문인지, 여당의 당보인지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25일자 사실에서는 "민주신당 창당은 공동여당의 공조 속에 원내안정의식을 확보함으로써 김대통령이 좀더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확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국민들은 민주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국민회의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국정을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이 모두 그렇다. 제호 변경, 인권에 대한 관심, 과거청산 등 그 동안 긍정적 변화도 적지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무색할 만큼 여당홍보지로 전략한 듯한 일련의 논조는 독자들을 우울하게 한다.

동아일보 어경택 칼럼 <대통령 부인이 입은 옷은?>의 경우 선정적 보도태도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가정과 추론을 통한 '소설 쓰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이 칼럼에서 어경택 논설위원은 이번 '옷로비사건'이 터질 때부터 옷로비의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문대로 이 여사는 라스포사의 옷을 입었는지, 그 집 단골손님인지, 정일순 사장과는 언제부터 알게 됐고, 친분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논점에서 빗나간 의심을 갖고 그는 이번 사건을 "실상 사건의 뿌리는... 권력핵심부까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에 근거해 논리를 폈다.

칼럼 후반부에서는 옷로비 의혹의 본질을 상당히 비껴가다 못해, 너무 유치하기까지 하다.

"그 국회의원의 말대로 20년간 남대문 시장 옷만 입었는지,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옷은 몇 벌이나 되는지, 문제의 라스포사에서 산 옷은 없는지, 있다면 몇 벌이나 샀는지, 라스포사 것 이외의 고급 옷은 어느 어느 디자이너의 것을 구입했는지, 특히 이번 필리핀 방문때 입고 간 옷은 참 좋아 보이던데 어디서 만든 것인지 ... 무슨 옷을 입느냐는 것이 로비의 본질과는 무관하겠으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힐 때 이 여사와 청와대를 감싸고도는 갖가지 소문들은 사라지고 국민과 청와대의 간격도 좁혀질 것이다"

어씨의 말대로 "무슨 옷을 입느냐"는 것과 '옷로비'와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어씨가 '옷로비사건'에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면, '대통령 부인이 무슨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점과 이회호씨와 관련된 의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어씨의 칼럼은 근거가 부족한 '가정'을 늘어놓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밝혀서 청와대의 투명성을 찾으려는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은 칼럼이 되었다.

손석춘의 어른 읽기

자랑스런 아들이었다. 이곳이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많았다. 대
략여 볼기가 시대의 과제인 민주화에 걸바였다. 최후반을 맞아 한지
10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아들을 살리려 어머니는 6월항쟁 직전
공을 떠벌이 군에 보냈다. 어머니를 탄압하며 일어난 스텔렌산의 아
들은 제 다섯 달도 안돼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슬한 젊은이들이
그러했듯이 외로운 죽음이야. 억지로 아들을 군에 맡긴 작한 어머니
는 끝내 한강에 몸을 던졌다. 아버지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아제 아
들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 비극의 한 보편이다. 가슴을 찢는 슬픈 이야기는 여서
그치지 않는다. 제 아편적인 군사정권 때의 외연사는 빛과 그림자를 이
룬다. 아들의 죽음과 참혹한 주검을 가슴에 품은 아버지가 국회 앞에 모였
다. 외연사진상규명특별위를 제정하라며 한겨울 갈바람 속에 오늘로
농성 394일째를 맞는다. 길가에서 1년 넘게 한영집을 지는 그분들에게
오늘의 관대한 국회, 오늘이 정치는 무엇인가. 애그, 청년 불교심은 것
은 저라리 언젠가. 젊은 꽃들이 꽃잎을 뿌리며 군사정권과 싸울 때
언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을 괴롭힌다느니 난동
을 부린다느니 반체제라느니 몰아세웠다. 심지어 "황폐를 내리라"는
사실도 공증했다. 그래서였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삶을 태우고 피를
사르는 고통으로 민주주의를 노래한 것은, 아니 정규한 것은.

만일 당시 언론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여론을 조급이라도 반영했
다면 비극은 그만큼 줄었을지 모른다. 아니었다. 언론은 비레 쿠데타
장군들에게 학생들을 "총을 든 난동자"로 보도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 적어준다. 바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다. 김
주필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더이상 그의 과거를 기록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반체제' 죄와 벌

그러나 그는 11월 27일치 '김대중집행'에서 반체제 사범은 엄벌
마땅'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경의 공안기능이 중
대한 도전이 직면해 있다"로 시작한 칼럼은 "가치관의 전도"를 개탄
한다. "김 대통령에 집권한 이후 이 사회에 혼공성 분위기가 점증하
고 있다"는 노획한 배경론이 이어진다. 그는 "과거 공안기능이 문제
가 있었다고 해서 공안기능 전부를 매도하거나 가치전도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참으로 예리한 논
법이다. 도대체 누가 공안기능 전부를 매도하고 있던 말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아수적인 고문과 감시의 수사조작 범
였다. 왜 사태를 과장하는가.

김 주필은 경지할 필요가 있다. 고문경찰-수사조작 혐의에 대한 조
사를 두고 "공안기능 전부를 매도한다"거나 "간첩이 사대질 하는 공
안"이라 말미하는 것은 불합당한 행동이다. 결국 그의 결론은 "반체제
사범을 엄히 다스리라"는 것이다. 좋은 말이다. 다만 과연 누가 반체
제 사범인지는 이 기호에 분명히 가려야 한다.

두부 있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헌정정서를 파괴한
'정치장군'들이야말로 반체제 사범이다. 그들이 민주시민들을 학살
할 때 오소리 시민들에게 "총을 든 난동자"라 한 언론인 또한 마친가
지다. 반체제 사범을 엄벌하라는 김 주필의 의상이 점조준할 과녁은
바로 그 자신이다. 민주주의를 외친 슬한 젊은이들이 외연스럽게 죽
어갈 때 김 주필은 용다"고 하지 않았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희생하
며 민주헌정운동을 벌일 때도 있었다. 10년 넘도록 "한겨울에서 가장
영광의 있는 언론인"으로 자신을 키워온 김대중에게 일가이 부러지는
것이 그가 느낄 아쉬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사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영광의 이란
80년대 천주회의 그것처럼 부처적인 것임을 그는 정말 모르는 것일
까. 그가 자신의 글로 저지른 '죄'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어쩌면
바로 그점이야말로 그에겐 '벌'일지 모른다. 여론왜곡, 그만하면 중



추천칼럼 - 한겨울 12월 2일자 손석
춘의 어른읽기 <반체제' 죄와 벌>

추천칼럼 - 한겨울 12월 2일자 손석 춘의 어른읽기 <반체제' 죄와 벌>

이 칼럼은 '최고사설'에 추천되었으나 두 가지 이
유로 탈락, 추천칼럼에 선정되었다. 첫 번째는 [손
석춘의 어른 읽기]가 최근(지난 해 10월) 최고사설
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재고되었다. 또 이 칼럼
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은
지난 11월 최악칼럼 <간첩이 사대질하는 공안>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최고, 최악 사
설 선정이 마치 김대중 논설위원 비판에 매몰된 것
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
유다.

이 칼럼은 우리나라 언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해 휘둘렀던
언어폭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폭력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불거졌던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재수사를 두고 김 주필이 주장한 공안기
능 약화문제라든가 반체제 사범 운운했던 것이 비
판의 초점. 손 부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정치
군인들이야 말로 반체제 사범"이라며 민주시민들
을 "총을 든 난동자"라 한 언론인 또한 마찬가지로
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김대중 주필
이 반체제 운운하며 비판할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자신의 글로 저지른 '죄'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여론왜곡, 그만하
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비판, 영향력 1위 언론인
에 대한 용기 있고 적절한 비판이 돋보였다.



III '99 기획모니터

'99 기획모니터

▶ 기획 모니터 1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 조선일보와 지역감정

▶ 기획 모니터 2

조선일보 공화국

- 조선일보 독설

▶ 기획 모니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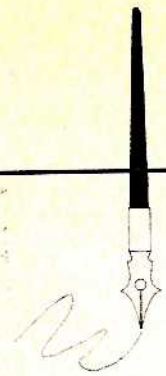
채별언론

- 채별언론의 독립운동

▶ 기획 모니터 4

NGO관련 기사 모니터

- 국내 NGO보도 걸음마 단계



기자 학교

● 강사...

- 임재경(민언련 언론아카데미 교장,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 손석춘(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 최민희(전 월간 말 기자,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 정지환(월간 말 기자)
-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 오연희(월간 말 심층취재 전문기자)
- 김영식(사진실험공간(PARA)살장)
-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한겨레문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강좌.
언론종사자 및 실무자
워크샵으로 기획된 본
강좌는 기사작성에 대한
실습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신문제작을 경험할 수 있다.

● 강의내용

기자정신에 대하여 / 신문제작구조의 이해 / 스트레이트기사쓰기 / 현장취재의 이해(월간지) / 인터뷰기사쓰기 / 특집기사와 르포 / 해설기사 바로쓰기 / 편집읽기와 제목달기 / 언론매체와 사진 / 논설칼럼 바로쓰기 / 지역언론과 민주주의 / 신문제작 평가 2회

▶기간 : 3개월 매주 수·토 주2회 (연4회)

▶수강료 : 400,000원

기획 모니터 Ⅲ-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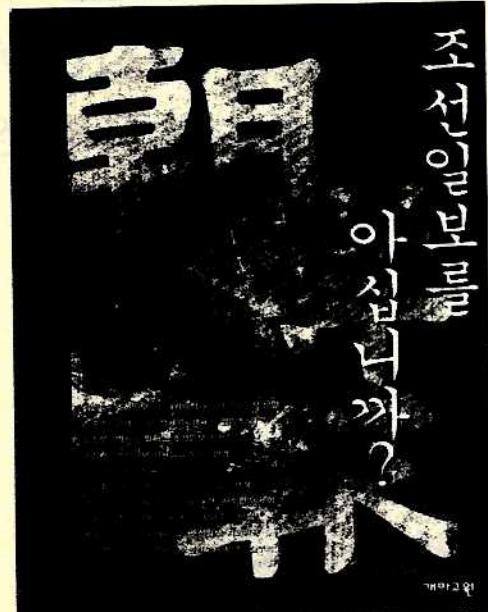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 조선일보와 지역감정

번갈번
번갈번...



기획모니터



15대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97년 12월15일 밤 『국민신당』 당원들은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의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겨레 21] 189호(98년 1월 3일 발행) 보도에 의하면 이날 김대중 주필은 "대통령 선거 뒷날이면 국민신당과 국민회의는 모두 죽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신당은 차치하고 김주필의 이 발언은 조선일보가 국민회의와 김대중 후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는 조선일보의 일관된 입장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99년 1월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마산, 구미집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은 물론 조선일보의 지역감정 부추기기는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다.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나선 조선일보

99년 1월 24일과 31일 마산과 구미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한나라당 집회는 IMF 이후 대규모 공단밀집 지역인 영남지방이 겪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불안한 민심을 이용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다른 신문에 비해 조선일보는 이를 집중 부각, 지역감정 조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마산집회 다음 날인 25일자 3면 <흔들리는 영남 민심을 붙잡아라>에서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편중 인사 표적사정 ... 연고기업 몰락한 탓. 민심이반 현상을 지역감정으로 몰다니...">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올렸다. 같은 날 7면을 보면 <현수막 ... 피켓 ... 대선 유세 같아>, <의원 70여명 집결, "보복정치·지역차별" 2만여 청중에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집회가 대단한 열기 속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26일자 사실에서는 "집권 1년째 『국민의 정부』가 그 동안 혹시 오만하거나 편파적이거나 보복적인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부 국민들이 왜 그런 유언비어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결국 유언비어 난무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결과적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조선일보와 지역감정 -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으로도 한나라당의 지역감정 조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1월 31일 있었던 구미집회 역시 조선일보는 충실히 보도하였다. 2월 1일 조선일보 1면 중앙에는 <구미의 『한나라』>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한나라당 집회 사진이 실렸고 바로 아래 "정계 개편-편파 빅딜 중단"이라는 딱딱한 제목이 두드러진다. 물론 <여 "지역감정-노사갈등에 불지르는 행위">라는 작은 제목도 달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면 관련기사에서도 <"緣故기업 파탄" 들어 지역문제 총공세>, <인구 절반이 공단 근로자 'TK 산업화'의 상징>라고 제목을 뽑았다. 이 기사에서는 "공단의 침체가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단 근로자와 시민들 사이에선 '현 정권이 박정희 고향 구미를 박해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을 정도"라고 써 지역감정 조장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 집회에서 나온 각종 유언비어들. 대부분의 내용은 현 정부가 영남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영남을 지역감정의 피해자로 부각시키고 있

현수막... 피켓... 대선유세 같아

의원 70여명 집결 "보복정치·지역차별" 2만여 청중에 호소

한나라당 이회창(후총통) 총재가 26일 오후 경남 마산의 공영에서 열린 '김대중 정권과 국민성 및 평화시장' 규탄대회에 참석, 소수의 유언비어에 대해 의원 70여명, 2만여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센터> 기자·jir-lee@chosun.com>

이회창(후총통) 총재가 26일 오후 경남 마산의 공영에서 열린 '김대중 정권과 국민성 및 평화시장' 규탄대회에 참석, 소수의 유언비어에 대해 의원 70여명, 2만여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센터> 기자·jir-lee@chosun.com>

이회창(후총통) 총재가 26일 오후 경남 마산의 공영에서 열린 '김대중 정권과 국민성 및 평화시장' 규탄대회에 참석, 소수의 유언비어에 대해 의원 70여명, 2만여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센터> 기자·jir-lee@chosun.com>



◇龜尾의 「한나라」 31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김대중 정권 국정파탄 및 부당빅딜 규탄대회에서 이회창 총재 등 정치도부부가 청중들을 격려하며 손을 맞잡아 불어 보이고 있다. <구미-루머기자·jir-lee@chosun.com>

"정계 개편-편파 빅딜 중단"

野, 영남권집회 계속... 설까지 추가집회 강행
與 "지역감정-노사갈등에 불지르는 행위"

한나라당 이회창(후총통) 총재가 26일 오후 경남 마산의 공영에서 열린 '김대중 정권과 국민성 및 평화시장' 규탄대회에 참석, 소수의 유언비어에 대해 의원 70여명, 2만여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센터> 기자·jir-lee@chosun.com>

다. 과연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지역감정의 피해자라면 피해자라 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기득권 유지와 회복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이 조선일보 살린다?

조선일보의 대표적 논객 김대중 주필은 87년 8월 2일자 칼럼 <지역감정>을 통해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전라도 푸대접의 형태로 서서히 악화되었으며 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극도로 예각화하여 이제는 비등점을 넘어선 정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시비로

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사’로 지역시비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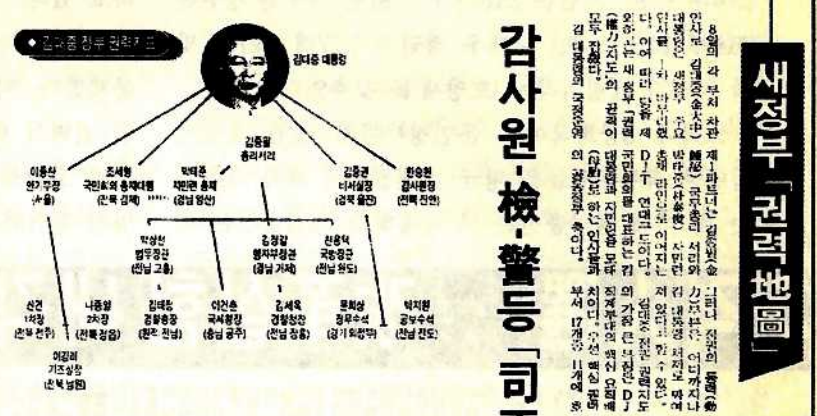
98년 3월 3일 김대중 정부의 첫 번째 인사가 단행되자마자 조선일보는 ‘호남편중 인사’라고 공격했다. 3월 4일자의 각료분석기사는 <호남-충청출신이 55.4%>라고 제목을 달았고 3월 9일자 <DJ직계 통치 핵심에 포진>, 4월 20일자 <‘낙하산 인사’ 절대 없다더니...호남출신 13명...영남출신은 5명뿐> 등 마치 실상이라도 폭로하듯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전문성이나 도덕성, 개혁성 등 인사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출신지만을 따졌다. 무엇보다도 출신지를 분석할 때 전남, 북은 호남으로 묶은 반면 영남은 TK PK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 현재의 DJ연합정권은 호남과 충청을 묶어 계산한 반면 과거 3당 합당이라는 절차를 거친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는 충청, TK, PK 등으로 기반지역을 분류,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이러한 편파적 잣대와 출신지별로 분석, 비판한 것은 과거의 인사상 차별 문제는 은폐하고 현 정권의 지역편중을 강조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거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편파적이든 공정하든 출신지별 분류와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까? 결론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등 역대정권의 인사에 대해 지역 편중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 인사 현황을 보면 현재 지역차별 인사를 문제삼은 조선일보가 왜 과거

‘DJ직계’ 統治핵심에 포진



17개 要職중 11곳에 호남출신 自民聯은 의곽 배치

김대중 정부(1998.3.15. 출범)의 17개 要職중 11곳에 호남출신 自民聯은 의곽 배치

김대중 정부(1998.3.15. 출범)의 17개 要職중 11곳에 호남출신 自民聯은 의곽 배치

구분	계	서울,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	이북
3,4공화국	432	62	60	130	24	24	9	87
5공화국	156	28	21	67	8	8	0	16
6공화국	142	28	19	58	5	2	2	12

(표-1) 3,4,5,6 공화국의 출신지별 관료진출현황 (인구비)
 * 정부 각 부처의 장, 차관 및 담당 각 부처 장을 대상으로 함 * 1961.7 ~ 1990.6까지 기간임

근육을 치른 최장집 교수 역시 “지역감정의 형성은 유신체제하의 호남지방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직접적인 계기를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어 “호남지방에 대한 구조적 배제와 김대중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두 구성요소로 하는 호남차별문제는 곧 유신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비리를 집약하는 정치적·사회적 문제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감정의 연구 P 31-33)

이 두 사람의 지적에서 드러난 대로 현재 망국병이라 불리는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의 호남소외정책에서 출발했다. ‘지역감정’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등 영남 출신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영남패권주의’로 발전하였고 이들의 공동 ‘적’이었던 김대중과 호남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호남소외속에 영호남간의 감정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은 지역감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누적된 지역모순 특히 ‘호남차별’이라는 고질병이 만들어낸 호남민의 저항을 폭발시키는 계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지역감정은 반공이데올로기 못지않게 지배권력의 기반이 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조선일보는 지역간 경제 불평등, 인사상 차별 등에 대해 침묵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역갈등 구도를 만들어 지역분열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지역감정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오히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보다 부각, 이를 지역감정의 본질인양 호도하였다. 결국 ‘지역감정=호남’이라는 등식으로 영남 패권주의를 강화시킨 대표적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한사코 반대하던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조선일보의 지역감정 조장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이는 한나라당의 영남권 집회를 계기로 노골적



地域감정

지역감정(地域感定)은 영남출신 대통령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호남출신 인사에 대한 차별적 배치를 지적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어 “호남지방에 대한 구조적 배제와 김대중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두 구성요소로 하는 호남차별문제는 곧 유신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비리를 집약하는 정치적·사회적 문제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두 사람의 지적에서 드러난 대로 현재 망국병이라 불리는 우리 나라의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의 호남소외정책에서 출발했다. ‘지역감정’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등 영남 출신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영남패권주의’로 발전하였고 이들의 공동 ‘적’이었던 김대중과 호남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호남소외속에 영호남간의 감정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은 지역감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누적된 지역모순 특히 ‘호남차별’이라는 고질병이 만들어낸 호남민의 저항을 폭발시키는 계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지역감정은 반공이데올로기 못지않게 지배권력의 기반이 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조선일보는 지역간 경제 불평등, 인사상 차별 등에 대해 침묵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역갈등 구도를 만들어 지역분열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지역감정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오히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보다 부각, 이를 지역감정의 본질인양 호도하였다. 결국 ‘지역감정=호남’이라는 등식으로 영남 패권주의를 강화시킨 대표적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개혁성'이어야 한다. 실상을 무시한 조선일보식의 비판은 '국정의 효율성과 능률성도모'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거나 잘못된 성골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선거는 지역감정 조장 단골 메뉴

지역감정이 지배이데올로기화하고 지역 분열과 대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거는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었다. 군사 독재정권은 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지역분열을 조장, 결과적으로 합법적 수단인 선거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대표적 선거로는 71년, 87년, 92년 대통령 선거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지역감정의 책임이 여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도 '지역감정 역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여야를 병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본질을 은폐한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악용된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를 보자. 동아일보 71년 4월30일자 <지역감정의 극한 대결>은 당시 공화당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찬조연사들이 경상도지역에서 지역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말단 조직선전요원들의 지역의식 고취는 이 지방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 중진반연사로 유세를 벌인 이효상 국회의장은 영남지방유세에서는 [경상도의식]을 유달리 강조, 지역의식을 고취했으며 어떤 연사는 영남지방에서는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친근감을 일으키게 하는가하면 ... 겉으로는 조용한 선거였으나 일선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 선전이 난무했다. 뚜렷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 집권이후 지역감정이 심화되었다.

현 연합뉴스 김종철 사장도 "사상 유례없는 부정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그 선거에서 박정희와 그 참모들은 '호남인이 집권하면 경상도 사람은 다 망한다'면서 위기감을 일으켜 영남의 표를 몰아가고 전라남·북도에서는 온갖 장미빛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감정의 연구 - P17]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뭇 달랐다. 71년 4월 3일자 '표따라 말따라'라는 스케치 기사에서 잠깐 언급했을 뿐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여권에 대한 의제로 선거 유세장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감정' 보다는 박정희 후보가 주장했던 '안보'와 '경제개발' 문제를 쟁점으로 다뤘다. 반면 지역감정에 관한 한 오히려 호남지역과 더 연관지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9일자 <한표바람은 불었다>라는 기획기사가 대표적 예다.

이 기사는 '호남푸대접론의 부당성을 갈파하는' 호남지방의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을 취재한 것이다. 이 기사는 "전남북의 거의 모든 공화당 조직은 유권자들 곁으로 다가가 무장된 이론으로 [푸대접론]과 맞씨름을 벌여 진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보아 신민당은 [호남바람]을 믿고 경남을 경북과 [분리]시키려 들고, 공화당은 조직 설득으로 호남바람을 중화시키면서 호남바람을 역이용하여 영남표를 다지려는 게 지역문제에 얽힌 기본"이라며 지역문제를 진단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이때부터 지역감정 문제에 있어서 호남을 먼저 거론, 그 일차적 책임을 호남에 돌리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지역감정으로 더 단결한 곳은 바로 영남이었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박정희였다. 조선일보 역시 그 해 4월 29일자 <다시 동서현상-표의 지도>에서 "지역에 대한 구심력은 호남보다 영남이 더 강한 듯 하여"라며 영남 지역감정을 완곡하게나마 인정했다. 조선일보가 지역감정 조장의 책

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선거 이후 보도에서 더 잘 설명된다.

당시 김대중 후보 진영에서는 개표 직후 대대적인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하며 "부정선거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인 4월 27일자 사실 <제7대 대통령 선거의 날>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제7대 대통령 선거전이야말로 여야 양대정당이 주로 정책대결을 통한 통렬하고도 당당한 접전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킨 결과"라며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수준에 가까워 온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지역감정은커녕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선거전에는 여권의 지역감정 조장에 침묵했던 조선일보가 선거이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대신 '지역감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부정선거시비를 잠재우는 데 동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보도태도였다.

선거결과가 발표된 4월 29일자 1면 만평에서는 동서로 나뉜 한반도 지도 위에 수북히 쌓인 표를 그려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지역감정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같은 날 <다시 동서현상...> 역시 "선거 결과는 원색적인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대결로 후퇴해버리고 말았다"며 지역감정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 서도 이 기사는 "후보들의 이런 자세와 병행, 선거운동원들의 분위기도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모두가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양상을 띠어왔다"며 선거운동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여권의 지역감정 조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날 4월 29일자 사실 <박대통령의 3선 확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잠재우고 있다. 이 사실은 "이번 선거가 다소의 말썽은 있었고, 또한 앞날의 민주제도를 위해 반성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곤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거의 절망에 가까웠던 혼란한 선거전의 면목을 어느 정도

일신"했다며 실제 선거에서 있었던 '지역감정 부추기기'나 '부정선거'에 대한 박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지역감정을 이용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실 <4.27선거의 소회>에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가지가지사례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으로 반성되어야할 부정들이 적지 않게 범해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무더기 표를 투입한 사건 투표함이 봉합되지 않은 사건 투표용지분실사건 대리투표를 한 사건 선과위장의 사인이 적히지 않은 투표용지" 등 실례를 통해 심각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박정희 후보의 선거전략에 따라 '지역감정'이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지역감정은 망국병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야당의 기세가 높았던 71년 4.27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기 위해 지역감정은 '좋은' 전략이었다. 조선일보 보도는 그런 박정희의 선거전략에 수위를 맞추며 지역감정을 다루었던 것이다.

지역감정 = 호남?

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는 71년 선거보다 지역감정이 더 심화, 악용된 경우로 꼽힌다. 당시 87년 직선제 선거에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폭발된 호남민중의 저항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김대중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그 표현 중 하나였다.

반면 같은 해 6월 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던 지배권력에게 87년 선거는 제로섬 게임과도 같았다.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만으로는 이반된 민심을 잡고 저항세력을 누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이들은 뭔가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이때 착안한 것이 '양김 분열'과 '지역감정'이다. 당시 조선일보 선거보도의 주요 의제가 양김분열과 지역감정이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조선일보는 87년 선거보도를 통해 '지역감정 = 호남문제'라는 등식을 고착시켰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지역감정이 호남인들의 피해의식에서 생산되고 표출된다는 의미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감정의 생산자를 바꾸어놓았다. 자연스럽게 영남패권주의에 기인한 지역감정문제는 희석되고 말았다.

조선일보의 대표적 논객인 김대중 논설위원.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대로 지역감정이 박정희의 전라도 푸대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너무 잘 알아서 인가. 그는 지역감정의 문제를 '호남민의 피해의식'으로 귀착, '지역감정=호남'이라는 등식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87년 12월 6일자 표발칼럼 <「피해극복」의 논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이 칼럼에서 "광주와 전주에서 만난 각계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마치 말을 맞춘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피해자의 논리를 내세웠다. 『아니, 도 대체 가해자 아니면 수혜자들이 자기들이 잡아야만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피가 거꾸로 흐를 소립니다.』"며 호남민심을 전하고 있다. 얼핏 보면 조선일보가 광주 시민들의 김대중 후보 지지를 수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조선일보의 교묘함이 있다. 이 칼럼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은 광주민들의 '피해자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호남민들의 투표행위와 지역감정을 연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호남을 지역감정의 '실천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

그것은 한두 사람의 느낌이나 주장이 아니다. 온 도시가, 온 전라도가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공공연한 모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후보의 벽보를 붙이는 사람이 수난을 당한 끝에 이제는 새벽이나 한밤중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됐다. 거리와 벽에는 평민당 후보의 포

스터와 현수막만이 가득해 보였다. ...

만에 하나 김대중후보가 만나오게 된다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봤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오래도록 쌓여왔고 나름대로 논리를 지닌 덕지덕지 늘어붙은 피해자의식의 켜와도 같은 것이었다. ...

이 칼럼은 "호남민들이 '감정이 아닌 피해의식'을 매개로 김대중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중 몇 명이나 감정과 피해의식을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글은 호남민들이 지역감정안에 묶여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었을까? 당시 조선일보는 광주 외에도 부산과 대구의 [표발칼럼]을 내보낸 바 있다. 각각 홍사중, 유근일 논설위원이 작성한 이 칼럼들을 보면 광주에 대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우선 12월 5일자 부산-김해 표발칼럼 <「선거판은 장날이라예」>을 보자. 이 칼럼은 "부산민심이 김영삼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면 혼나겠지?」 슬쩍 떠본다. 「아니라예.」 그에 의하면 그의 부인은 언제부터 민정당원이 됐는지 노후보를 지지하고 다닌다고 한다. 자기 부인하나 단속하지 못해서 쓰느냐고 핀잔주니까 「그렇게 민주주의 아닌기요」 하는 대답이 나온다. 부산시내로 들어오는 길가 벽면에 즐비하게 부착된 김대중 후보의 멀쩡한 포스터들이 눈에 번쩍번쩍다. ... 「선거가 좋으냐」고 물으니까 「시골사람에겐 선거는 잔치여 ... 장날도 흥겹지만 어디 선거판만큼 합니까.」 그렇게 묻는게 어리석다는 투다.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12월 8일자 대구표발칼럼

에서도 '모두가 의견 달라' 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이 칼럼은 특히 대구지역의 응집력을 '지역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공동체'라고 표현, 지역감정과 거리를 두었다.

전통적인 대구 공동체의 長老세대에 대한 신흥의 20대, 30대, 그리고 40대초의 도전, 이 도전이 이번 선거에서의 대구의 야성으로서 맹렬한 기세를 울리고 있었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른바 「지역감정」이란 것을 가슴아파하면서 개탄했다. P교수는 「지역감정」이란 본래 향토사람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인지상정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음모적으로 악화시킨다며, 지역감정」이란 말 자체도 들먹이지 말자고 역설했다. 대구엔 찢어진 벽보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대구 지역의 응집력을 '전통적인 대구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 기사는 이후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전략은 이 전통적인 대구 공동체의 與性 기존구조도 밑으로부터 파먹어들어가는 형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는 '공동체속의 다양한 의견'이고 광주는 '피해의식에 근거한 지역감정적 지지'라면 13대 대통령 선거정국을 흥미하게 했던 지역감정의 문제는 결국 호남문제로 귀착된다.

12월 1일자 사설은 한술 더 뜬다. <한을 푸는 최선책은/「광주유세 방해」에 대한 명상>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노태우 후보의 광주유세 현장이 그처럼 수라장이 된 것도 그 뿌리를 깊이 깊이 캐보면 거기엔 광주사태라는 엄청난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단순히 「지역감정」으로만 색칠해 버리려는 관점은 온당한 것이 못된다"며 '광주'를 이해하는 척하고 있다. 그리고 곧 "그 한을 풀기는 꼭 풀어야만 하겠는데, 그 방법으로서 돌과 각목과 난폭한 유세 방해가 과연 최상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다. ... 그 한을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 풀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선거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한을 풀라는 것인데 이는 얼핏보면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을 선거를 통해 투표로 풀라'는 것은 '호남민들이여 김대중 후보를 찍어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더 나아가 지역감정을 호남민들의 문제로 고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87년 선거당시 대구, 광주, 부산 등 일부 유세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지역감정을 이용, 정권창출을 꾀하던 집권여당의 의도에 맞게 보도되었다. 조선일보는 유세장 폭력사태가 지역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영남지역보다는 호남지역에서의 폭력사태를 더 우려하는 논조를 보였다. 기사량과 크기에서도 차이가 났음은 물론이다.

사실 당시 폭력사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폭력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폭력의 현상만을 다루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말지 87년 12월 10일자(격주간인지 확인할 것) <대구 집회 폭력, 외부서 조작의혹/광주집회 난동 청년 나탄 선동 폭력> 기사는 이러한 의혹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11월 15일 대구에서 열린 '군부독재종식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결의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외부세력이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대회장 안에서는 수백명의 청년들이 '노태우!'를 외치며 돌아다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하자 '김영삼!'으로 구호를 바꾸기도 했다. ... 대개가 술냄새를 질게 풍기는 수백명의 정체불명의 청년들은 관중석에도 돌을 던졌다. 또, 광주에서 왔다는 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 "어제 '김대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던 한 청년이 오늘 집회에 또 나타난 '김영삼'을 외치며 난동부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구폭력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11월 16일자 1면 4단 보도기사로만 작게 취급되었다. 관련 기사도 없었다. 이 사건의 시비를 떠나서 이러한 보도태도는 전날 광주에서 있었던 김영삼 후보의 유세장 폭력사태와 너무 비교된다. 조선일보는 광주유세장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1면, 2면, 사회면 머리기사로 매우 크게 보도했다. 15일자 1면 머리기사는 <김영삼총재 광주유세 좌절/연단 앞 점거, 피켓뿔어 불태워/수만명 "김대중" 외치 연설 못해>라는 '생생한' 제목을 달고 있다. 사회면에서도 <"이러다간 큰일난다"/광주 유세장 폭력에 시민들 걱정, 말할 기회조차 안 주다니>로 컷 제목을 뽑아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11월 17일자에서 조선일보는 <폭력화한 「지역감정」... 선거·나라 망친다>, <"유세장 난장판은 국민이 분노">등 매우 격양된 논조를 보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작은 제목이었다.

야측 조장 주장에 "40년전 국민 아니다" 노태우 씨
"선거방해 민주적 적 ... 광주 다시가겠다" 김영삼 씨
"폭력사태는 관권이 조장한 것" 주장 김대중 씨

위의 세 제목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광주'라는 지역명이다. 또 김영삼 후보에 걸친 제목은 비록 말줄임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는 마치 광주가 '민주적 적'인 것처럼 뽑았다. 이어 노태우 후보의 제목은 '관권이 조장했다'는 김대중 후보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결국 광주는 '민주적 적인 유세장 폭력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김대중 후보는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권의 해명이 있었다'로 결말지어진다.

지역감정과 야당분열을 직접 관련 짓는 기사도 있다. 11월 17일 조선일보는 2면과 3면에 각각 <삼국시대의 「再版」 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라

社 說

광주 폭력사태에 대한 보도 태도는 11월 16일자 1면 4단 보도 기사로만 작게 취급되었다. 관련 기사도 없었다. 이 사건의 시비를 떠나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전날 광주에서 있었던 김영삼 후보의 유세장 폭력사태와 너무 비교된다. 조선일보는 광주 유세장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1면, 2면, 사회면 머리기사로 매우 크게 보도했다. 15일자 1면 머리기사는 <김영삼총재 광주유세 좌절/연단 앞 점거, 피켓뿔어 불태워/수만명 "김대중" 외치 연설 못해>라는 '생생한' 제목을 달고 있다. 사회면에서도 <"이러다간 큰일난다"/광주 유세장 폭력에 시민들 걱정, 말할 기회조차 안 주다니>로 컷 제목을 뽑아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11월 17일자에서 조선일보는 <폭력화한 「지역감정」... 선거·나라 망친다>, <"유세장 난장판은 국민이 분노">등 매우 격양된 논조를 보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작은 제목이었다.

는 사실과 칼럼을 내보냈다. 특히 사실은 "잘라 말해서 市井의 「삼국시대」론의 탄식은 양김씨에게로 그 책임이 돌아감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이고 ... 오늘의 영-호남 「적대감정」의 불씨를 뿌리고, 각각 자신의 집권을 무슨 신화나 받은 절대성처럼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행동에 돌입하여 기름을 끼얹고 부채질을 했다"고 쓰고 있다. 유세장 폭력의 원인을 지역감정으로 보고 그 책임을 야권 후보의 분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면서 노태우 후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위의 시각은 같은 날 사회면 '각계소리'에서도 드러났다. 이 기사는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부각된 지역감정문제는 단일화를 못한 양김씨에게 직접원인이 있다"라고 말한 뒤 이어 "또 야당후보들은 이같은 지역감정이 자신들의 후보단일화 실패에

기인했음을 인정,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호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는 여지없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루어졌다.

조선일보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게 아님을 드러내주는 기사도 있다. 11월 28일자 <작은 목소리가 퍼져서/「지역감정 없는 날」의 1일 찾집 얘기>라는 기사를 보자. "지역감정의 원인은 지역간 차별, 지역출신에 따른 사람에 대한 차별에서 생겼다. ... 정부에서부터 우수한 대기업체에 걸쳐, 출신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예가 있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사람들에게 한을 심어주고 맺히게 하며, 지역감정을 명들이고 부채질하고 그 뿌리를 깊이 심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교묘함을 한번 더 확인해 보자. 11월 22자 김대중 칼럼 <내년 2월이후의 「그림」>은 "에당초 이번 선거가 군정종식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되기를 기대했다. 선거의 쟁점도 군정종식의 문제로 집약되기를 바랐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는 한판의 멋진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라고 적고 있다.

호남배제, 조선일보 社則인가

92년 대선에서는 87년 대선의 심화된 지역경쟁 구도에 비해 지역감정이 퇴조했다는 '지역감정=호남' 등식 만들기에 성공했던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일보에서는 그렇지 않다. 87년 선거 이후 조선일보는 92년 선거에서는 아예 김대중 후보와 민주당에게 지역감정의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조선일보는 5월 25일자 사실 <민주당이 도약하려면>에서 "아울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인사는 「민주당 정권」이 결코 또다른 편협한 지역주의로 나가게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여타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이 질문

에 민주당이 무엇이냐 답하는지 우리는 주목하려 한다"고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지역감정을 악용하며 정권기반을 다졌던 여당은 완전히 제외된 채 또 다시 호남을 거론한 적반하장적 주장이다. 92년 선거 보도에서 이러한 논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김대중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나온 5월 27일자 사실 <언-행일치 지켜볼터>을 보면 이 사실은 호남배제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역성 극복과 대통령 후보라는 목표를 위해 참고 양보하면서 이기택씨의 무리한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그 결과 주변에 비호남권을 갖추게는 되었다. ... 세대교체론, 낚시론, 새시대론의 요구와 40%에 달하는 변화 요구의 이씨 지지세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새 인재의 발탁과 호남 인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마치 김대중씨만이 '지역감정=호남문제'의 책임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듯이 쓰고 있다.

사실 92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와 민주당은 광주지역 유세를 취소하는 등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일보도 위의 5월 27일자 사실에서 "호남 지역의 한정된 리더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광주유세를 취소하기도 했다"라고 쓴 바 있다. 또 6월 7일자 <대통령 만들기의 선진화>에서도 "여기에 김대중 민주당 후보가 지역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호남에서 대규모 옥외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TV토론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선거운동의 主武器로 활용될 전망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김대중씨가 이전에 지역감정을 유발했다는 점과 호남 옥외유세라도 할라치면 바로 지역감정 조장으로 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김대중씨와 민주당이 지역감정 극복을

11월 17일자에서 조선일보는 <폭력화한 「지역감정」... 선거·나라 망친다>, <"유세장 난장판은 국민이 분노">등 매우 격양된 논조를 보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작은 제목이었다.

위의 세 제목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광주'라는 지역명이다. 또 김영삼 후보에 걸친 제목은 비록 말줄임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는 마치 광주가 '민주적 적'인 것처럼 뽑았다. 이어 노태우 후보의 제목은 '관권이 조장했다'는 김대중 후보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결국 광주는 '민주적 적인 유세장 폭력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김대중 후보는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권의 해명이 있었다'로 결말지어진다.

【 기자만들기 】

기자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및 기자체험강좌. 기자론으로 시작한 강의는
기사작성법, 취재론, 기자윤리, 기획, 사회진출 및 매체창간까지
관심있는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담임강사 ●
오연호

(웹신문 OhmyNews창간준비위원장,
월간 말 심층취재 전문기자)

● 강의내용

기자론 / 기사론(기획론, 문장론)
/ 현장취재(일반론, 영상화론, 메
시지론) / 인터뷰(일반론, 특수상
황) / 심층취재 / 인터넷뉴스 /
매체사진론 / 취재원관리법 / 마
감지키기 / 기자윤리 / 사회진출
과 매체창간론

▶ 기간 : 2개월 매주 금 주1회

▶ 수강료 : 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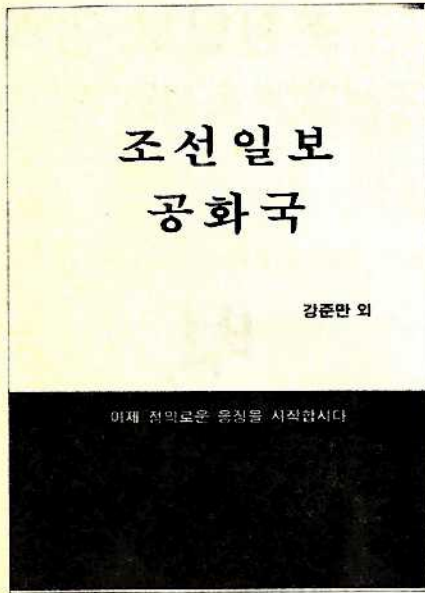
기획 모니터 2

조선일보 공학국
- 조선일보 독설을 해부한다

백길건
백기작..



기획모니터



강준만 외

조선일보 공화국

이제 전막로운 응징을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공화국

조선일보 독설을 해부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한 언론사의 입장과 그 언론사의 보도·편집 방향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입장자체가 극도로 편향되어 있거나 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라면 자사의 입장에 따라 보도하는 것이 아무리 상식이라 해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언론사의 입장이 공기(公器)를 무시한 채 자사이기주의 혹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언론의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의문을 던져주는 대표적 신문이 조선일보다.

영향력 1위로 알려진 이 신문은 '공정한 신문' '좋은 아침 좋은 신문' 등 스스로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조선일보는 스스로에게 화려한 수식어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타자를 향해 가하는 비판은 '독설적'이다. 독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방하거나 해치는 말'이다. 물론 타파해야 할 관습, 척결해야 할 비리 혹은 비리 연루자에게 내뱉는 독설은 독자들의 체증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그게 바로 공기(公器)로서의 진면목일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독설이 정 반대

의 경우에 행해진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정당화하는데는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한 반면, 사회개혁을 위한 일련의 주장과 개혁세력들에게는 독설을 퍼부어 왔다. 대개는 학생, 노동자 및 재야운동세력에게 가장 많이 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각종 시국사건, 양심선언, 조직사건 등이 있을 때 조선일보는 여지없이 독설을 내뿜었고 노동자들의 파업, 김대중 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도 조선일보의 독설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조선일보가 특정세력을 지목, 독설을 가한 후에 그 영향력은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진보적인 공직자는 물러나야 했고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바뀌었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감옥으로 향했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독설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언론보다는 파시즘적 언론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후퇴 혹은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벗기 어렵다.

조선일보의 독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말 그 자체가 욕설에 가까운 낮뜨거운 것을 비롯하

여 사실을 마구 왜곡하며 가하는 독설, 교묘하게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들,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독설 등 다양하다. 이 독설에 대한 비판이 어찌보면 '트집잡기'식으로 혹은 지엽적인 문제로 비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독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조선일보 독설은 민주주의와 독재정권의 갈등, 인권과 비인권의 대립 등의 상황에서 등장했고 언제나 후자편이었다.

'귀하는 안기부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진실 편인가, 기자 편인가'

위 제목은 월간조선 96년 4월호에서 당시 성혜림 망명 관련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자회견보를 향해 우종창 기자가 던진 말이다. 우기자는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김정일적 시각을 가진 국내 일부언론" 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극단적 표현은 바로 흑백논리에 의존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많은 독설들이 바로 흑백논리의 오류를 안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오늘 최근호(189호 99.48일자)도 조선일보 지면의 정체성을 '반공·반북'으로 정의한 바 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조선일보가 '사고친' 예는 수 없이 많다. 타지보다 한발 앞서 보도 한 것까진 나쁘게 없지만 그 와중에 대형오보가 발생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86년 11월 16일 김일성 사망설 보도,

96년 2월 조선일보의 성혜림 망명설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월간조선의 이동욱 기자는 오히려 오보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독설을 가했다. 그는 98년 가을 발행된 사보를 통해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죽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 무슨 큰 실수인가?" "김일성 사망설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친북지식인들이거나 김일성과 무슨 밀약을 해놓은 사람의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관련 보도는 얼마든지 오보를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배어있는 말이다. 더 나아가 기사의 생명은 '사실'이라는 '보도의 가나다'조차 거부하는 발언으로서 그의 기자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북한 관련 보도로 오보시비를 거는 진짜 이유는 ...북한의 관영언론을 그대로 국내에 유포하려는 [좌익 상업주의 친북한 상업주의 언론]들의 작태"라는 독설이 이어졌다. 오보를 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기자의 모습에서 서글픔마저 느껴진다.

흑백논리가 지원하는 독설은 조선일보에서 의외로 많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이 고조되던 86년. 당시 5·3 인천사태 이후 민주민중운동세력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노골화되어 가던 시기다. 그해 10월 30

김영삼정부하에서 진보인사로 분류되던 한완상통일부총리나 김정남 교육문화수석은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속에서 결국 공직을 떠나야했고 현정부에서 주목받던 김태동교수나 최장집교수도 처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사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색깔시비는 월간조선에 선정적인 제목과 도발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일간지를 통해 이슈화과정을 거쳐 결국 '정리'되는 식이다.

95년 통일원 공익광고문안의 참고자료 중 하나였던 「나는야 통일 1세대」. 그러나 저자 이장희 교수는 이 책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소송까지 당했다. 95년 출간되어 그해 11월 24일자 조선일보의 신간안내에도 소개된 바 있는 책이지만 연방제 통일을 설파하고 있고 북한의 나쁜 점은 감추고 좋은 점만 부각, 이교수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월간조선이 97년 7월과 9월호에서 문제삼은 것이다.

월간조선은 '남한식이나 북한식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라고 한부분을 두고 연방제가 아니냐며 추궁했다. 또 조선일보 97년 5월 23일자 <얼마나 아십니까 북한상식>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의)애국가'가 이장희 교수 책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이 교수를 용공으로 몰아갔다. 반면 북한의 문제점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의도적인 사상공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장희 교수의 이 사건은 2번의 영장기각을 거쳐 불구속기소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늘 이런 식이다. 내가 하면 애국이요 남이하면 용공이다.

'진보인사 죽이기'의 가장 최근 예는 최장집 교수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6.25관'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월간조선 98년 11월호에서 시작된 이 논쟁에 대해 10월24일 일간지를 통해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 "80년대 이후 그가 발표한 일련의 논

문-저서들에서 일관"되게 "좌파적 시각을 견지" "지금은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6.25 개전 초반은 민족해방전쟁..." 등의 자구를 예로 들고 있다. 10월 26일자에서는 "최장집씨의 용어 사용, 개념규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는 현저히 배치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시각이) 대규모로 확산된다고 할 때는 대한민국 정당성의 뿌리와 뼈대는 존재할 자리를 잃게된다"며 흥분하고 있다.

11월12일 만물상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극좌그룹 활동을 이야기 하면서 "극좌파들이 가장 선호한 직장은 공직, 그중에서도 중-고등학교와 대학이었다...독일 정치인들은 그 점에 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의 머리를 바꾸는 변혁전략을 그림시는 「진지전」이라고 불렀다. 우리도 눈여겨 볼일"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마치 대학교수인 최교수가 의도적으로 "체제속에 들어가 체제를 바꾸려는 장기적 변혁운동"을 시도했고 위험한 "독버섯"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밖에도 진보인사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석현 의원은 조선일보에게 매도당한 인사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오익제 월북사건으로 정국이 한창 시끄러웠던 97년 8월,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남조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석현 의원에 치명적인 독설을 가했다.

"아무런 의식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그 무식과 몰상식에 놀라고 이런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사실에 수치감을 떨칠 수 없으려나와 혹 그가 고의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의 사상과 노골성에 기가 막혀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훼손... 제명도 불사하는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폐기 지시되었던 당시 안기부 보고서가 우연히 발견됨으로써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꾸민

月刊朝鮮 特大號 11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안과 용기를 얻는 잡지! 月刊朝鮮입니다

別冊부록 釜山이울

民主化의 代價는 비싸게 치러졌다

崔章集의 충격적 한국전쟁觀

反共소년 이승복의 「난 공산당이 싫어요」

화난 李晔昌의 걱정토로

조작론을 제기한 세력, 사실의 공세 앞에서 퇴각

明成皇后를 죽인

청기조칸의 팩스

공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김대중 총재의 개인 비서를 지낸 이의원에 대한 사상시비를 통해 색깔논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그리고 안기부의 이런 의도는 조선일보가 "제명도 불사"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조선일보가 이의원의 무혐의를 알고도 무리한 사상공세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이의원이 쓴 [너도 밤나무 아래서 쓴 나도 밤나무 이야기]에 의하면 이의원은 가판에서 조선일보의 사실을 확인하고는 류근일 논설위원에게 전화하여 문제의 명함을 팩스로 보냈다고 한다. 팩스를 본 후 '외국인에 대한 과잉친철이 문제로군요'하며 고쳐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달라진 것은 14자의 추가 뿐이었다. 류주간은 98년 9월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전화받고 딱하더라고, 분명히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씨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나 친북성향의 해외교포들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의 논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이의원은 자진탈당형식의 출당을 당해야 했다. 진상이 밝혀지고 이의원은 다시 입당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한 인간을 마녀사냥의 제물로 삼았던 조선일보는 한 마디 사과도 없다. 조선일보는 조만간 '양치기 소년'의 신체를 꺾지 않을까.

한편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진보인사, 양심적 지식인으로 통하는 고 문익환 목사도 빼놓을 수 대상이다. 그가 89년 방북했을 때 조선일보는 '망상'이나

'백치'등의 인신공격적 독설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비단 문익환 목사 뿐 아니라 임수경씨, 문규현 신부, 서경원 의원 등 방북인사들 모두 조선일보의 독설을 피할 수 없었다. 양상만 달랠을 뿐이다.

1989년 3월 28일자 사설 <그는 대한민국을 무시했다>에서 조선일보는 문익환 목사의 행동을 "도취", "편집적 사고"라고 폄하하였고 "우리는 편집적이고 독선적인 한 개인의 행동에 의해 돌연히 우롱당하고 뒤흔들린 느낌을 가지며, 심한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봤길래 그랬는가 말이다."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리고는 아예 "몽상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그의 평양도착 성명을 볼때, 그가 이미 한국이라는 체제를 일탈한 사람이라는 인식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 사실을 포함한 당시 조선일보의 어느 기사에서도 문익환 목사가 왜 북에 가려했는지, 북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떠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문목사의 사소한 행동에 대한 분노로 일관하여 독자들마저도 객관적인 평가를 힘들게 했다는 비판이다. 같은 해 6월 29일자 <국기가 흔들린다-서경원식 해국정후군을 척결하라>라는 사설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방약무인한 행동", "서경원식 해국정후" 등 서의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사실왜곡은 1989년 7월 2일자 <남한내의 북한 정후군-입북시리즈와 전대협과 [평축]->이라는 사설에서 극에 달한다. 조선일보는 당시의 방북에 대해

“문익환, 황석영, 서경원, 임수경 등 여러 사람들의 입북러시는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징후군으로 파악해야 하리란 사실이다... 북한 당국의 치밀한 대남 공작의 연속적인 수확이었음을 이제는 부정할 길이 없게 되었다.”

며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방북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한 '7.7선언'과 무관하지 않다.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당선 이후 북방정책으로 구 소련과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남북경제교류 차원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할 정도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더구나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발표한 '7.7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되어 이런 화해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다. 결국 당시의 입북러시는 조선일보가 단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공작'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초했던 행동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일부 인사들의 입북러시, 북과 해외 친북그룹의 준동, 그리고 전대협의 반합법투쟁등 작금의 동향을 우리는 북을 축으로 한 커다란 동일 징후군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문규현 신부를 파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서도 독설을 가했다. 7월 27일자 <일부 사제들의 경우>라는 사설은 "천주교 신부들 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든 임의단체"고, "의심의 신통가"들이며 "객관적으로 그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운동단의 한 지원그룹"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런 조선일보 사설만 읽게된다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천주교 내에서 별 영향력도 없는 몇몇 운동권들의 모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과거 74년 생김이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적 양심을 지켜왔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때마다 사회의

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한편 조선일보는 문익환 목사와 문규현 신부가 성직자라는 점을 이용, 종교적인 내용을 이용한 독설도 가했다. 7월 28일자 이문열의 시론 <메시아를 거부할 사람들>이 바로 그것. 이문열씨는 두 종교인들을 향해 "정히 그 말씀이 낱고 자신의 인간적인 신념에 어긋나 있다면 차라리 입고 있는 사제복을 깨끗이 벗어 던질 일이다"라며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보여주었다. 이는 조선일보의 어느 독설 못지 않게 강도가 높은 것으로서 조선일보에서 외부필진에 의한 이러한 독설은 심심찮게 등장한다.

조선일보를 지키는 '외인부대'

조선일보에게 미운털이 박힌 진보인사와 달리 조선일보에서 '활약하는' 몇몇 지식인은 조선일보보다 더한 독설로 '외인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 대표적 인물은 누가 뭐래도 박홍 신부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박홍 총장은 근거도 없는 말의 발설로 유명하다. 근거가 없으니 논리도 없고 앞뒤가 안맞는 실언이 많다. 91년 5월 정국에서 박홍 총장의 '죽음의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발언을 조선일보는 충실히 받아주었고 결국 유서대필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다. 이후 94년 여름 공안정국에서도 조선일보는 박홍 총장의 발언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를 '용기있는 지식인'으로 칭송하고 다른 지식인을 꾸짖기도 했다.

94년 7월 20일자 사회면 기사. 제목은 <“한총련상대 팩스지령 타슈젠트서 현장목격”> - 「주사파 배후」 발언 박홍총장에 듣는다. - 이다. 이 기사에서 박홍 총장은 “주사파학생들의 배후에 사로맹과 북한 사로청, 김정일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몇 년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당시 연행목총리와 6개월동안 지내며 교육을 받은 학생운동권의 핵심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었다”고 했다. 박홍 총장은 늘 이런식이었다. 매우 자신있게 '직접 보았다', '직접

들었다'라고 운동권을 비판하지만 막상 그 정보원은 불분명하다. 게다가 '학생운동권 핵심'이라니. 같은 날 한겨레는 "검찰 공안관계자들도 사노맹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대해 개인숭배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배후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도 노동당의 대중기구 일뿐이고 북한에서 남한의 혁명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노동당의 대남담당 비서나 정무원 산하 통일선전부와 작전부에서 따로 맡고 있어 '대남 지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근거가 명쾌한 얘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홍총장을 '용기있는 지식인'으로 추앙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사설 <용기있는 지식인의 할 일>에서는 "자신 스스로 북한의 김일성을 흠모하는 '주체사상파'라고 하는 운동권은 지금 자신들이 북한의 지도노선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증거를 대라며 박홍총장을 몰아세우면서 총장해임 운동이다, 고발이다 하며 심지어 그의 신변을 괴롭히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조선일보는 증거를 대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상투적인 전략전술'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홍총장을 회생시키지 않기위해, 같이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동참과 일제 발언을 촉구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관성도 근거도 없는 박홍 신부의 발언을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박홍 신부는 기회있을때마다 주사파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박홍 신부는 93년 8월 21일 전대협 동우회 결성식에서 '반민주·독재와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으며 각계각층에 진출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축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94년 7월 박홍 신부의 돌출발언은 박 신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드러난 사례이다. 즉 당시 '구국전위'라는 조직사건이 터졌을 때 박홍 신부는 구국전위가 전대협동우회

와 한총련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외인부대에서 황씨를 배울 수 없는 인물이다. 사실 조선일보가 황씨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망명후 황의 잇단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그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견지해온 대북인식과 정책대안이 정확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의기양양 했다. '3일만에 부산점령'이나 '5분내 서울 갯가루' '우리의 권력 깊숙한 곳'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북에 대한 경계와 내부의 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황씨의 걸려지지 않은 일련의 발언들이 "오다가다 주위 들었거나 자신이 추정하는" 주장들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신문들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앞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진위를 확인한 뒤 발표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조선일보는 "의문을 제기하려면 검증책임은 그쪽"에 있다는 회한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배척"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놓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선일보야말로 정치적 이유로 황씨 발언과 논문에 대해 검증과정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황씨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황씨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저서에서 독일 뮌스터 대학의 송두울교수에 대해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씨 발언이라며 월간조선은 이를 보도한 뒤 "국내 좌파 지식인에 영향기친 재독 송두울교수/북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며 조선일보 지면에 보도하였다. 황씨의 주장은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고 여러 목적

에 이용하기 위해 송교수를 김철수란 가명아래 정치 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했으며 김일성이 그를 접견한 사진을 신문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정의 근거로 더해지는 것이 김일성장례식때 장례위원 서열 23위로 직책이 생략된 김철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 데, 마침 송교수가 조문차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근거로 그렇게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송교수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데 김철수는 김성수라는 인물임을 확인하는 재독영사증명서와 국정원에서 송두율이 김철수임을 확인한다는 답변서 등이 나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위협하다'라고 했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송교수가 김철수라고 단언하지는 않으나 황씨의 주장을 계속 다뤄주고 송씨의 '친북적 성향'을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황장엽망명이후 "그의 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으려는 풍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안의 친북 내통자들부터 색출해내는 것이 급선"같은 주장을 빈번하게 전했다. 그런데 한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장엽리스트'의 '간첩5만명'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무시하는 '언어폭력'

91년 6월 6일자 칼럼 <馬中可 韓中漫筆 [홍위병屍(강시)의 망명들]>. 이 사실은 한국외대 학생들이 정원식 총리에게 계란을 던졌던 사건을 두고 학생들을 맹비난하는 사실이다.

정원식교수를 짐승 다루듯 이리 저리 질질 끌고 다니며 肉形을 가한 ... 이제 한국외대의 물인성의

폭도들을 보자... 이번 한국외대의 소수 폭도들은 체제 전복과 국가 안정파괴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극단 반정부 세력의 전술결사대로 이용당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라면서 "폭도들은 학생이기를 거부한 인간 쓰레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날뛰고있는 어릿광대에 불과하다

과연 당시 학생들의 행동이 '인간 쓰레기'라는 비난을 들을만큼 크게 잘못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학생이 선생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는 현상만을 두고 맹비난했다. 현상만을 보면 학생들을 두둔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 단순히 현상만으로 '쓰레기'라는 비인간적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여론도 높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제 치하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오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 죽인 일을 볼 때 현상만을 보면 안중근 의사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다. 그러나 누가 그의 행위 현상만을 두고 비판하는가. 정원식 총리사건도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원식이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으로 보면 외대학생들의 행동을 비판, 그것도 '쓰레기'라는 욕설에 가까운 용어를 서슴지 않고 남발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더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식이 어떤 인물인가.

정원식총리는 우선 89년 전교조 사태로 유명하다. 1천5백27명의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89년 5월 28일 한양대에서는 전교조 결성대회가 열리기로 했었고 학생회관 3층방에서 원천봉쇄가 풀리기를 기다리던 교사들은 느닷없이 밀어닥친 백골단에게 온갖 폭행을 당했다. 정원식총리는 당시 문교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을 비롯 교사해직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인물이었다.

또 91년 사건당시 일부에서는 정 총리서리가 사

건을 도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꽤 설득력있다. 월간 말 91년 7월호 [정원식의 두얼굴]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그날따라 평소에 타지않던 지하철까지 타고, 이유야 어쨌든 취재진에 둘러싸여 전교조 탄압의 장본인으로 그가 총리서리가 된 후 발생한 김귀정씨 사망사건등에 격앙되어 있던 대학구내에 모습을 나타낸 정 총리서리는 과연 순진하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정황들은 일부에서 정 총리서리가 사건을 도발한 게 아니냐는 '역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 사건 이후 치뤄진 지자체 선거는 지지기반을 상실해가던 여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말지는 위의 기사에서 노태우 정권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막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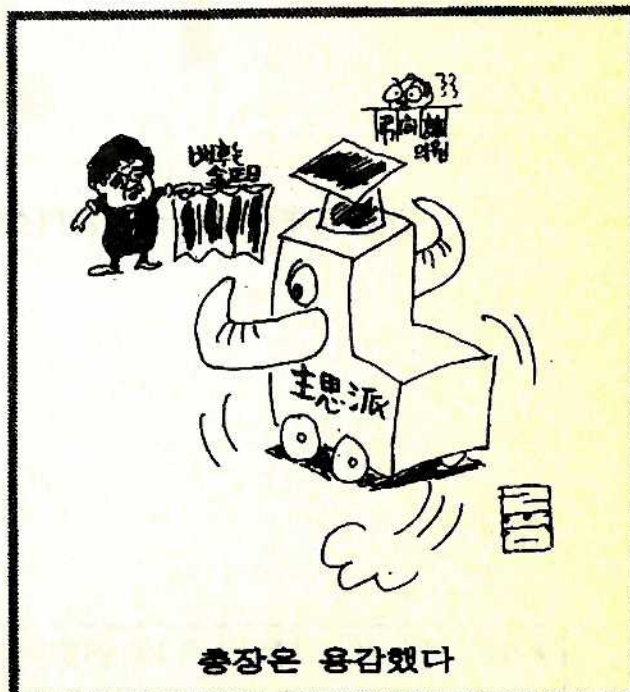
한편 독살이라기 보다 '언어폭력'에 가까운 것도 발견되었다. 대선 직전 이회창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던 손대희 중령에 대해 조선일보는 97년 12월 2일자 '팔면봉'([만물상] 원판에 배치)에서 '충정(忠情)을 '충정(蟲情)으로 표기, 비아냥거렸다. 다음날인 3일자 사설 <군인의 위험한 시국선언>에서는 "일개 현역군인이 어떻게 [시국선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어이없어 하며 손중령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 더 나아가 "적이 손중령의 선언을 보고 오판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적행위도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손중령의 시국선언문에는 군에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군사재판에서도 '이적행위'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오판의 자료'운운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일개 현역군인'이라며 손중령을 비하하는 오만하고도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는 것은 독살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다. 당사자인 손대희 중령은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조선일보공대위소식' 2호에서 "나는 조선일보라는 '조폭'에게 당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자. 이쯤되면 조선일보는 더 이상 '좋은 아침 좋은 신문'이 아니다. '좋은 아침 열받는 신문'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 스스로에게 화려한 수식어를 달면서 남을 비방하고 해치는 독살가. 바로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이다. 94년 7월 17일자 사설 <「마략」論>에서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은 어느 만큼 저질 발언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은 조선일보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다.

朝鮮漫評 吳龍



【 대학언론강좌 】

대학언론사 일꾼 및 기사쓰기에 관심있는 이를 대상으로 전현직 기자들의 현장감있는 강의가 일품입니다. 신문의 제작구조와 편집론, 기사작성(스트레이트와 인터뷰) 실습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강사

손석춘 (한겨레여론매체부장), 정지환 (월간 「말」 기자), 정광섭 (한겨레신문 기자), 최민희 (전 월간 「말」 기자,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김효곤 (교사, 전 「우리교육」 기자), 임종업 (한겨레신문 편집부 차장)

● 강의내용

시민언론운동론/신문제작구조의 이해/기획과 현장취재/기사작성실습1 (스트레이트)/기사작성실습2 (인터뷰)/우리말글 바로쓰기/신문편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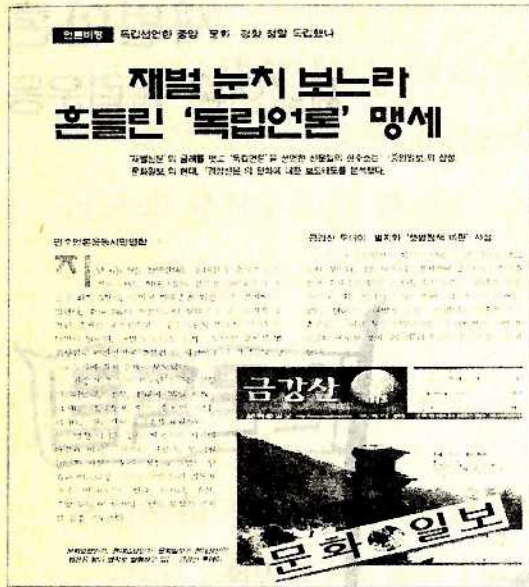
▶기간 :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1주 4시간(1-5시) 총10강좌
▶수강료 : 70,000원(대학언론사 단체할인 50,000원)

기획 모니터 Ⅲ-3

재벌언론
- 재벌언론 독립운동



기획모니터



'독립언론(?)' 문화일보, 변한 것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구씨 등 5형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계열회사들이 현대전자 주식 값을 조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만의 일이다. 반도체사업 구조조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해 6월부터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현대가 반도체사업 빅딜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벌의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제적 범죄행위로 강하게 비판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각 신문은 2-4쪽에 걸쳐 자세히 보도하였다. 가장 비중있게 보도한 경향신문의 경우 <정부, 현대에 '빅딜체적'>(4/9), <정주영씨일가 수천억 차익>(4/10), <현대전자 주가조작 계열사에 -1%영향>(4/12) 등 사건의 배경과 여파를 자세히 기사화하였다. 또 4월 10일자 사설을 통해 '정상

급 재벌의 탈법과 비도덕성 그리고 구멍 뚫린 감독 체제'를 비판했다. 한겨레도 4월 12일자 사설에서 "주가조작은 이 나라 최대 기업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며 "일단 손댄 이상 정부는 철저한 보강 조사와 수사로 진상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반도체 빅딜' 압박용인가>(조선 4/9), <2,200억 동원해 주가 띄우기>(중앙 4/9) 등이면을 분석한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이 사건을 침소봉대했다. 4월 9일 경제면 2단으로 <현대중-상선 주가조작 혐의/금감원, 수사의뢰 ... 현대측 "사실과 다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문화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현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화일보의 태도 역시 현대그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일보는 별지까지 만들어 보도하는 등 금강산 관광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분량도 엄청나 현대그룹의 사업에 대한 홍보성

재벌언론의 독립운동 재벌언론의 '독립운동', 지면으로 평가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기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업이 남북 화해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주목받을 일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문화일보가 남북 화해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와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북한관련 기사에서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북한 경비정 침범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햇볕만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다" (6월 10일자 사설)

"우리는 여기서 남쪽이 선의와 협력의 뜻을 갖고 대해서도 비방방송과 억지주장을 하고있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회의가 일지 않을 수 없다." (5/18일자)

"우리는 여기서 포용정책의 고수만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98/12/18)

또 하나 주목해 볼 기사가 있다. 지난 해 8월 21일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극적타결을 이룬 것과 관련, 문화일보의 보도태도는 기존의 재벌언론이 단순히 모재벌로부터의 독립했다고 해서 곧 '독립언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 시각을 던져 주는 예다. 파업이 있을때마다 노동자를 매도하고 사용자를 편들기 바빴던 태도는 재벌언론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기존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재벌언론의 틀을 벗은 이후의 태도 변화의 귀추가 주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대자동차 사태가 해결된 것을 두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문화일보의 비판은 어느 언론보다 강했다.

문화일보는 <현대차 사태와 정치논리>(8/22 사



설), <나쁜 선례된 현대차 타결>(8/24 사설), <현대차 사태의 후유증>(8/25 기고), <현대차 해결 보는 외국시각>(8/26 사설) 등 연일 논평 기사를 실었다. 이들 기사를 통해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처음부터 지나칠 정도로 개입, 대기업 정리해고의 첫 시범케이스가 된 이 사태가 정리해고를 힘들게 하는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언론이 재벌의 입장에서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문화일보는 그 전면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문화일보의 소유구조 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같은 일련의 보도태도의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해(98년) 3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공식 분리되었다. 월간 말 6월호에 실린 창간 14주년 축하광고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매우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일보 우리사주조합·노동조합·기자협회'명의로 이 광고는 "문화일보의 주식소유 형태는 세계적인권위지인 르몽드지와 유사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문화일보 주식은 사원이 38.5%, 2개의 공익재단이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재단이라고 하는 문우언론재단과 동양문화재단은 소유구조 개편과정에서 현대가 만든 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가 문화일보를 완전독립시켰다기 보다는



경향신문, 한화그룹에 대한 우호적 시각 '혐의' 벗으려면

100% 우리사주 신문, 경향신문은 자신만만해 보인다. 경향의 소유주였던 한화그룹은 현대, 삼성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오히려 자율빅딜을 성사시켜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한화그룹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한다는 혐의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 정도가 다른 재벌언론보다 좀 덜할 뿐이다.

4월 31일자 <첫 자율빅딜/ 추가빅딜 '물꼬' 뿜다>라는 제목으로 한화와 대림의 빅딜 합의 기사를 두 그룹 회장이 악수하는 사진과 더불어 매우 크게 실었다. 또 대한생명 입찰과정에 뒤늦게 참여한 한화

에 대해 6월 8일자 경제면 중앙에 <한화 박판 다 크호스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었다. 이보다 앞서 <한화 계열사 6-7개로 축소 대한생명 인수도 적극 추진>(5/31), <한화-대림 공동개발한다>(5/21) 등 다른 신문에 비해 한화그룹에 대한 기사도 많은 편이다. 특히 5월 31일자에는 <반재벌활동 인사 영입 전경련 이미지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전경련 회장이자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 회장의 인터뷰 기사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진정 독립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위의 한화관련 기사들을 좀 냉정하게 보도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자들은 경향의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기획 모니터 Ⅲ-4

NGO 모니터

- 국내 NGO보도 걸음마 단계



기획모니터

언론의 NGO 보도, 기본이 없다

가·80년대 저급기를 거친 언론계 기자들이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언론은 NGO에 밝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도 재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경쟁자도 아닌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NGO 보도의 내용은 중립적이 아니라

언론의 NGO 보도, 기본이 없다

언론은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의 양과 질은 언론계 기자들이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언론은 NGO에 밝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도 재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경쟁자도 아닌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NGO 보도의 내용은 중립적이 아니라

언론의 NGO 보도, 기본이 없다

언론은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의 양과 질은 언론계 기자들이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언론은 NGO에 밝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도 재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경쟁자도 아닌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NGO 보도의 내용은 중립적이 아니라

나 취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환경보존 관련 내용은 언론계 기자들이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언론은 NGO에 밝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도 재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경쟁자도 아닌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NGO 보도의 내용은 중립적이 아니라

언론의 NGO 보도, 기본이 없다

언론은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의 양과 질은 언론계 기자들이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언론은 NGO에 밝아져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도 재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경쟁자도 아닌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NGO 보도의 내용은 중립적이 아니라

NGO 보도 모니터

국내 NGO 보도 걸음마 단계!

김은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장)

을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시민운동가 125명을 상대로 한 언론의 NGO 보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이 설문결과에 따르면 몇몇 단체로 편중된 보도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단체활동에 대한 피상적 소개, NGO 활동에 대한 전문성·쟁점화 결여, 기사내용의 공정성 부족, 언론사 취향에 따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쓰여지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7·80년대 당시 '재야'라고 불리웠던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 언론은 과격하고 색깔이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낙인찍어왔다. 이들 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 계승되고 있고 언론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일제히 NGO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동아, 중앙, 한겨레가 고정면을 내보내고 있고 경향, 문화, 국민이 고정란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까지 내걸고 있는 이들 기사를 보면 언론이 마치 시민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시민운동에 대한 전폭적 지지 때문이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추세를 파악하고 상업적 측면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적극적 지지차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어느 주간지의 기자는 언론이 NGO에 대한 가치관이나 단체에 대한 이해 없이 '뉴스꺼리'를 쫓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부분만 확대 보도"하는 기존의 보도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언론이 NGO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진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실제 보도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통일이나 언론개혁, 주한미군범죄 등 민감한 주제를 피한 채 중산층 대상의 연성보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신문	모니터 기간	요일	고정면	제목	구성
동아일보	1월11일~9월30일	화	8면, 기획	제5의 힘 시민운동	머릿기사, NGO계시판, NGO인터뷰,
중앙일보	4월17일~9월30일	토	14면, NGO광장	시민의 힘	초기에는 NGO지도, NGO 소식 등으로 꾸며졌으나 이후 고정형식 없어짐. 현재는 세계의 NGO가 고정기사
한겨레신문	5월 8일~9월30일	수	19면, 엔지오		머릿기사, 지구촌연대, 함께해요(단신), 나?활동가

(A-1) NGO 관련 고정면 앞 신문

민운동을 체제 내적인 운동으로 한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이미 오랜 세월 반체제적, 반정부적인 사회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는 자칫 한국 시민운동의 뿌리와 그 독특한 배경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두 번째, 몇몇 종합운동단체에 치중한 보도경향과 이벤트성 기사중심으로 소개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연예인이나 명망가 중심의 보도, 흥미성 기사들이 비중 있게 다루지는 반면 다양한 분야가 소개되지 못했으며 지역이나 전문적인 시민단체활동은 홀대를 면치 못했다.

세 번째, 단발적 보도, 줄속기획으로 인해 생식대기식의 보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NGO에 대한 몰이해와 기자의 비전문성, 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해서 조차도 판성적 엘리트주의와 상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상업언론의 고유한 시각이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문제점 1>

대규모의 '종합운동단체'에 치중, 지역이나 전문분야 시민운동단체 소외

언론은 백화점식 시민운동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일부 종합운동단체의 활동만을 부각시켜 '문어발식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련 등의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특정분야의 전문단체나 소규모 단체,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가로막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쉽게 기사를 쓰려는 안이함과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보도없이 시민운동이 시민과 결합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이는 운동의 이벤트적 성격만 강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참여연대 키워주기가 아닌 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참여연대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권리 찾아주기 캠페인(2/5)', '소액주주운동(2/11)', '예산감시운동(7/13)' '재벌개혁 감시단(7/21)', '입법청원운동(7/27)' 등이 소개됐고 이중 참여연대가 단독으로 소개된 것이 3차례나 된다.

『NGO인터뷰』나 생활소개기사에서도 참여연대 활

신문명	모니터 기간	요일	면	고정란제목
경향신문	4월18일~9월30일	월	7	NGO마당
국민일보	4월20일~9월21일	화		NGO광장
문화일보	2월3일~6월23일	수	7	NGO발언대

(A-2) NGO 관련 고정면 앞 신문

동가가 4회나 소개되어 다른 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향신문은 특정단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는 없었으나, 각 사안에 대한 취재의존도(인터뷰멘트)가 일부 '메머드급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4월부터 7월까지 전체 기사중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요 단체를 기사화한 비중이 약 53%으로 절반을 웃도는 편중성을 보였다.

중앙일보 역시 '경실련 사회개혁단' 출범(6/24), '반부패 실천 국민행동' 출범(7/24), '재해극복 범시민연합 (8/7)'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9/4)' '문화개혁시민연대 (9/18)' 등 대규모의 연합체 조직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복지시민연합은 출범식(6/5)과 개소식(7/10)기사가 실렸고 경실련 사회개혁단, 경실련 탈퇴자들이 만든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출범 이후 후속기사를 실어 구미에 맞는 단체 키워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보도의 관성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7월24일자 '국민건강연대' 출범기사는 국민 건강권 확보가 목적으로 보건의료단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인데도 24개 참여단체중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만 소개되고 정작 의료단체는 제외되어 익숙한 단체위주로 보도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박원순 사무처장은 한 좌담회에서 "연대활동에서 참여연대가 늘 부각돼서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직접 단체를 찾아보고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존하고 매이저 단체 위주로 보도하는 관행과,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NGO발언대」라는 고정란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칼럼적 성격의 글을 매주 실었던 문화일보 역시 환경단체 6회, 교육·인권 각 3회, 참여연

대·경실련 각 2회등 특정 단체와 주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련의 경우 소속 활동가가 무려 4회나 등장하고 심지어 같은사람이 두 번 쓴 경우도 있어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와 같은 포맷으로 국민일보 「NGO광장」이라는 꼭지가 있다. 여기서도 한 단체의 활동가가 두 번 실린 경우가 3회 있었고 심지어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의 국제연대부장은 3번이나 실려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더욱이 문화 3월17일자에는 <새천년 지방자치 시민이 나서야>라는 글을 환경단체의 지방자치위원이 쓰도록 해 언론이 시민단체의 백화점식 활동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한겨레가 해외동포 입양아들의 국적문제를 다루는 '지구촌 동포연대 킴'(5/26)을 소개한 것이거나 '인권운동사랑방의 어린이 인권캠프 (8/11)', 엔지오면은 아니지만 지역시민단체들을 묶어서 소개한 7월20일자 17면기사와 동아일보의 광주NGO박람회(3/16), 탈북여성들과 남한여성들의 모임을 소개한 '무궁화와 진달래모임(4/6)',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있는 정대협기사(8/11)나 지역통화운동(8/17)소개 등은 바람직한 사례로 긍정 평가받았다.

특정 주제에 편중된 것도 지적받았다. 중앙은 그린벨트살리기(8/7), 경북경산 녹색네트워크(8/28), 지리산 지킴이(9/4)등 8,9월에 환경관련기사를 집중적으로 실었다.

문제점 2>

「생활 속의 권리」만 중요? 여성분야에 편중

흥미거리를 쫓아 가벼워지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접근은 NGO관련기사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쉬운(?)주제인 복지나 환경, 생활 속의 권리찾기 운동

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체제내의 운동으로 한정지어려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생활과 밀착되어있는 부분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구석에서 일어나는 억눌리고 밝히는 부분을 의면한 채 복지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이나 통일, 주한미군 범죄, 노동 및 소외계층문제, 언론개혁이나 동성애의 권리를 찾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알려내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긴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 신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부분만을 보도하는데 중앙일보와 국민일보가 특히 이런 연성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고정지면과 시민단체 후원운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화려한 걸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과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분야별 시민운동을 소개하는 「NGO지도」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축소되어 다양한 운동의 부문을 제대로 알려내는 데 실패했다. 또 실제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대표적인 단체들을 소홀히 다루어 운동의 역사성과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운동단체를 소개했던 6월19일자의 경우 <우리아이들을 위해... 백년대계 교육에 앞장/89년 '참교육 학부모회'가 시 전교조를 결성하려던 교사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으로부터 배척돼 무더기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였다>는 설명등 시민단체와 연대활동도 활발>이라는 제목아래 전교조를 언급한 내용은 "참교육운동을 내걸고뿐이다. 대표적 교육운동단체로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온 전교조가 치뤘은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성과는 묻어버리고 학부모단체의 연대활동이나 청소년지원, 상담활동이 주류인 양 부각시켰다. 이는 교직원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NGO지도」란에

인권이나 언론운동, 종교계의 활동등을 빠뜨린 체전화상담을 분야별운동의 한 분야로 설정한 것은 운동의 일반적인 구분조차 무시한 것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엔지오면에 매주 시민운동관련 슬로건을 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회의 구조적이고 상존하는 모순을 회피하고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 받고있는 여성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 부단하게 싸워온 여성운동에 대해 "지구의 절반, 여성의 따뜻한 감성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라고 하거나,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동운동에 대해 "일하는 보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노동운동, 그 바탕은 역시 사랑입니다"고하여 현실의 대립과 갈등, 차별을 사랑이나 감성이라는 단어로 덮어본질을 왜곡·회피한다는 지적이다. 5월22일자에 "시민운동계의 원로"로 한국 월드비전회장을 소개한 것은 중앙이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국민일보는 「NGO광장」의 주제가 장애인, 소비자, 보건·의료, 환경분야가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여 연성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문제연구 시민모임의 글이 <범죄화 시급한 산후조리원(5/4)>, <수도·가스 소비자 만족(6/29)>, <새화장품법과 소비자 보호(8/24)>등 3회나 게재되어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4월20일자의 <독신녀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글은 독신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없었던 과정에서 실려 사회현안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NGO 릴레이」도 <라파엘 클리닉(4/31)> <김봉현씨의 요한의 집(5/29)>등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미담기사가 주로 실린다. 종교지라는 특질상 봉사를 중시하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국민일보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우리 사회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볼 수 없고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다룬 내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점3>
시민단체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어**

6월항쟁이후 시민단체는 양,질 모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나 기부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재정이나 조직운영, 활동에 문제점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언론이 지적하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명망가 중심의 활동' '백화점식 운동' 언론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라는 등의 비판은 NGO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나열하거나 혹은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중앙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이나 흥미위주의 보도 태도를 보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문제를 다룬 5월22일자에는 "최근 시민단체 주변에 시민단체 위기관이 등장하고 있다"며 "새정부 개혁작업에 상당수 시민운동가들이 동참해 '발이 묶였다'는 평가가 있는데다 실업극복등과 관련해 정부, 민간의 자금지원이 전례 없이 시민단체에 쏟아져 운신이 제한을 받고 있는 탓"이라며 마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내실없는 몸불리기 말아야>라는 기사는 "요즘 시민단체들 큰 걱정"이라며 "IMF로 모두가 아우성인데 오히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재정이 튼튼해져왔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4월17일자 『NGO쓴소리』라는 란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

을 제시"했다며 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과거 정부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았던 관련 단체들의 모습을 볼 때 지원기준이나 과정, 방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중앙의 문제제기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사중에 실제 지원금을 받아 집행한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소개없이 정부 지원 반대를 일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기부금 모집을 제시하고 있는 데 부의 사회적 환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조차 제 때 지급 받지 못하면서도 일하는 간사들의 희생과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등으로 근근히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이 단체들의 현실임에도 마치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 시민단체들이 살이 찰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실상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경실련 내분을 다루는 기사 역시 사건의 추이를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시민단체내의 분란을 구경거리로만 삼았다는 비판이다. 7월에만 경실련의 문제를 3회나 다루었음에도 사건 속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 <경실련 내분 진정국면><내분 겪던 경실련 끝내 두조각> <경실련 내분 수습되려나>등 대표적 시민단체의 분열이나 추락을 엿보는 흥미성 기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동아일보 3월16일자 <시민단체 위기의 계절>과 7월21일자 한겨레<위기의 경실련 어디로 가나>는 경실련 갈등의 뿌리와 함께 시민운동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여 바람직했다

는 긍정적 평가다. 한겨레는 '사무국과 전문가 불런 터 사이의 위상과 구실의 분담문제', '시민운동의 자기정화능력'을 강조했고 동아는 관료주의와 실적 위주의 사업전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실련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기혁신을 이룬다면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 중앙과 대조적이었다.

경향은 경실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5월 30일자 <시민단체 양은 '성장' 질은 '답보'>라는 기사에서 내나라연구소 주최의 토론회 내용을 보도하여 현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토론회 내용과 함께 다각도의 취재를 포함했다라면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한겨레는 9월1일자에 참여연대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시민단체에 관한 의식을 여론조사한 결과를 실었다. "시민단체에는 호의적이지만 회비를 낼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를 상세히 보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단체가 이후 어떻게 활동방향을 설정할 지에 대한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정 주제나 분야에 편중. 균형감 상실.

신문사의 특성이나 관심사가 특정분야에 편중된 보도의 형태로 드러났다. 종교기관을 재단으로 하는 국민일보와 진보적 색채를 띠는 한겨레가 대표적 사례이다. 한겨레는 국내 단체의 국제연대활동이나 국제 엔지오 활동등 국제적 활동을 매우 관심있게 다루 국제인권문제를 주로 다루는 『지구촌연대』라는 고정란이 있을 정도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많이 다뤘는데 <국제투자자본에 제3세계 명든다(5/19)><초국적 자본에 맞선 '전지구적 저항'(6/16)> 등의 머릿기사과 민주적 세계경제질서를 모색하는 대구라운드 관련기사도 두 번(5/12, 9/15) 이나 실렸다. 『지구촌연대』라는 고정쪽지에서도 <국제금융기구에 모라토리엄!(6/16)> <초국적 금융기구 반대 "50년이면 충분하다"(6/30)> 등

을 다루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문제점을 비판적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IMF 상황을 맞아 신자유주의적 지배논리 일변도의 우리사회 분위기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하다. 비록 타신문이 외면하는 사안이라고는 하나 특정 주제로 지나치게 편중됐고 특히 국내문제의 경우 <나? 활동가>란이 초기에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변적 이야기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균형감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타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3세계 인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대 저항을 소개하는 <지구촌 연대>란은 진정한 국제화를 위한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다. 한겨레가 인물보다는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기사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엔지오면 이외에도 공동체(수), 비주류(목)등 시민단체활동은 아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연성화 경향이 두드러졌던 국민일보는 NGO단체나 활동을 기사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일반기사에서 북한 난민이나 식량난, 관련 NGO의 활동기사가 많아 주목을 끌었다. 또 조용기 목사가 몸담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란 단체를 국내의 구호활동을 벌이는 '비정부 민간기구'라며 기사화(9/17)하였다. 이런 내용은 국민일보가 종교자본을 토대로 하고있는 신문답게 난민구호활동류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적 기획과 자사 행사의 지나친 홍보

중앙일보는 '모두가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를 타이틀로 내세우고 '1시민 1시민단체 가입·후원운동에 참여합시다'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실제 얼마나 열심히 가입운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NGO인생><NGO발언대><이럴때 이렇게> 등의 쪽지가 한두번 진행되고 끝나버린 것에도 알수 있듯이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과 NGO에 대한

이해 부족, 연성화 경향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가 후원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세계 NGO대회와 관련해 6월19일 머릿기사로 다룬 후 7월이후 거의 매주 보도하여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넉달전부터 어느 나라의 누가 참석해 어떤 내용을 발췌하고 연설하며 준비가 잘되고있다는 자화자찬식의 기사등 일정과 홍보활동 위주의 내용을 매주 소개하는 것은 지나친 지면 낭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자본주의에 대항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마련을 논의하기위해 역시 10월에 열리는 대구라운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한 것은 NGO를 바라보는 중앙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하겠다.

맺는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언론의 'NGO열기'는 상업적 측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NGO에 대한 이해나 지식, 애정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성장해 온 과정과 그 역할을 이해한 속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NGO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졌을 때 제대로 된 NGO보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아울러 선정성을 좇는 일반적 보도준칙과는 다른 NGO 보도의 틀 마련과 전담기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아의 경우 생활,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들로 팀을 구성해 보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한다. 그러나 주간 동아기자의 "본업이 따로 있는 담당기자들은 어쩌다 돌아오는 NGO관련업무를 가윗일로 생각"한다며 NGO면이 때우기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한 고백을 접하게 되면 전담기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의 경우 담당기자가 한 명있고 <지구촌연대>쪽지의 경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진보네트워크란 외부단체가 공동 집필하는 형식을

가진다. 전문기자가 부족한 우리의 언론풍토에서는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기사를 쓰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9월, 1달간 고정지면을 가지고 있는 신문들 중 한겨레만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보도를 했고 동아와 중앙의 NGO면은 두 차례 실리는 것에 그쳤다. 광고에 밀리고 비중 있는(?) 다른 기사에 밀리고 언론사의 NGO보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나? 활동가 김유진/민연연 홍보기사

"언론개혁은 사회진보의 필요조건이죠"

언론운동은 언론을 상대로 한다. 열심히 일해도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이 흔치 않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연연)에서 워라라고 하면, 친구들은 "도대체 너 뭐는 무슨 일을 하나"라고 묻곤 한다.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묻는 친구도 있다. 그런 질문은 학교도 졸업했으니 이제 살려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거나, '언론운동보다 더 중요한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들리는 것이다.



저를 워라활동가는 그런 소말 달으면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나는 언론개혁이 사회진보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나에게 "그런 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보다 가슴아픈 건 없다.

하지만 나를 '기죽지 않노' 단연시켜 준 이들이 있다. 바로 민연연 회원들이나, 지금이야 언론개혁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높아졌지만 5년 전만 해도 언론운동은 언론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시민언론운동'이라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단체도 있나?" "인본비평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당신들이 만들어봐라" ... 시민들과 학자, 언론인과의 무관심과 비난을 감수하며 언론운동에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아온 사람들이 바로 민연연 회원들이다.

민연연에는 '자원봉사'가 없다. 상근지도 회원의 영광이다. 민연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회원'이 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남의 일을 돕는다는 뜻이지만, 회원활동은 우리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연연에선 상근자는 '돈 받는 활동가', 회원들은 '돈 내는 활동가'라고 한다. 돈을 낼 수 있으면 노동으로 대신한다. 물론 부가직을 다 하는 회원들도 많다.

우리 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결하게 파업할 수 있고 통일운동이 진부으로 대도 되지 않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기 위해서는 사회를 위해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일이 보잘것없고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언제까지 민연연 일을 할거냐"는 질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간사를 그만둔다면 그것은 '돈 받는 활동가'에서 '돈 내는 활동가'로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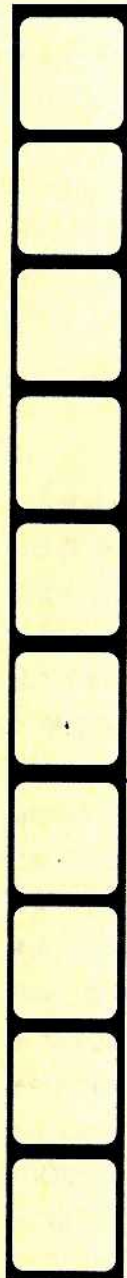
IV

'99 일상모니터

'99 일상모니터

- ▶ 경제관련 기사 모니터
- ▶ 국제관련 기사 모니터
- ▶ 사회관련 기사 모니터
- ▶ 노동관련 기사 모니터
- ▶ 대북관련 기사 모니터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의 현장감있는 강의가 일품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부터 매 강좌 실시하는 실습은 사진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사

김영식(사진실험공간PARA실장), 박진희(사진실험공간PARA사진가), 이정용(한겨레21사진기자)

● 강의내용

근대적 시선(투시법) / 동일시의 시선 / 초점, 노출 / 사진적 요소와 원리(심도, 동감) / 응시의 시선 / 시점, 프레임 / 르네상스적 시선과 바로크적 시선 / 조형적 요소와 원리 / 광선의 유형과 방향 / 인공광의 특성과 활용 / 이미지와 텍스트 / 구성방식(포토스토리, 시리즈, 시퀀스) / 몽타주, 다중시점, 유형학, 포토-텍스트

▶기간 : 2개월 매주 수·토 주2회 진행 16강좌

▶수강료 : 200,000원

정치 관련 보도 모니터 IV-1

골목정치



냄비언론

'99 이 달의 최고·최악 사설

정치판에 대한 불신과 환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529호실 사건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마산 집회, 고승덕 파문 등 뒷골목에서나 통용될 세력다툼과 편가르기가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언론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뒤로 돌아서서 누가 이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지 따지는데 급급했다. 탐사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골목의 논리가 그대로 언론의 논리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 ▶ 국회 529호실사건관련 보도
- ▶ 한나라당 마산집회 지역감정포장관련 보도
- ▶ 김대중 대통령 1년명사관련 보도
- ▶ 고승덕 사퇴파문 및 여당경연관련 보도
- ▶ 여와정 중계 '개2 민주화투쟁 선언'관련 보도
- ▶ 오토비 정권화관련 보도
- ▶ 국정감사관련 신문/방송 보도
- ▶ 서경연연인 사건 재조사관련 보도

지난 해 12월 31일 발생한 한나라당의 국회 529호 실 강제진입과 관련, 대부분의 신문이 진상규명에는 소홀한 채 정치공방을 지나치게 부각 보도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정치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러 차례 비판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일부 신문들은 자사 입장을 드러내는 기사를 실었지만, 그 역시 진상규명 보다는 각 신문들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1월 6일자 [정치사찰이 아니었다고?]에서 “안기부 고유 업무는 대공 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보안정보 (전북활동 등) 수집으로 한정된 것”, “이번에 공개된 국내정치 동향들이 과연 대공-해외-보안정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사찰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평소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의 입장이 반복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조선일보가 과거 안기부와 밀착관계를 유지했던 신문임을 고려하면, 고유하게 정치사찰을 반대한 논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 밖의 다른 기사들에서는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도 매우 강조되었다. 1월 6일자 2면에 실린 기자수첩(김민철 기자) [‘복사판’ 여야 공방]에서는 “과거여당이 지금 여당 논리로 과거 야당은 지금 야당 논리로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과거의 경험이 국정이나 정국의 건전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 1월 8일자 사설 [시대를 초월한 정쟁의 악순환]에서도 조선은 “여야 모두 정쟁의 당사자들이며 어느 쪽의 잘못이 여야간에 우리 정치가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여 허무주의적 시각을 표출하였다. 이 사실은 더 나아가 “이 저주스러운 숙명을 도대체 어떻게 벗

어나야 할 지 방도를 찾을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치사찰의 의혹이 짙다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안기부 임무에 대한 전반적 개념도를 주장한다면가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저주스러운 숙명’ 운운하며 정치 허무주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지녀야 할 언론 본연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치공방에 치중한 신문으로 중앙일보가 대표적이었다. 1월 6일과 7일 각각 3, 4 면에 <깊어진 대치정국>, <허절된 야 이총재 ‘내 탓이요’ 울먹>과 같은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난 대로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었다. 이와 달리 안기부의 ‘사찰’ 관련 임무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태도가 엿보였다.

1월 12일자 <529호실 사건>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의 발언대에서, 중앙은 “자국의 공무원이 자국 국회의원의 각종 행사 일정 등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며 안기부의 사찰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더 나아가 1월 14일 [오피니언 중앙포럼]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 게다가 세계 유일의 분단, 대치국가다”라며 “안기부는 프로다 워야 한다. 요원들도 드러내놓고 으스대서는 안 된다. 소리 없이 감쪽같이 해내야 한다”라고 쓰고 있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보도 태도에서 안기부가 정치사찰을 했는지, 한나라당의 행위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안기부의 정치사찰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이를 ‘감쪽같이’ 하라고 경고까지 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한편 대한매일은 여전히 ‘정부기관지’에 불과한

社 說

시대를 초월한 政爭의 악순환

최근의 일련의 여야 정쟁을 보자면 그 어느 쪽의 잘못이 여야간에 우리 정치가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실감함을 느끼게 된다. 정쟁의 당사자들은 이런 양극론을 흑백을 가리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어 어떤 정치란 도둑이 되느냐?는 고도에서 한심하게도 개탄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요즘 신문시장을 보면 어떤 여당이 어떤 이름만 밝히지 않으면 심수년전의 낡은 신문들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여당의 일각정쟁에 지향하는 야당의 그런 부패. 그 나쁜정쟁을 범한 부패가 단독적으로 반격해버리는 여당의 말아붙이기. 국회 529호실의 방치로 부수고 들어간 행위기 더 못내나 아니면 안기부 직원이 ‘정치사찰’을 한 것이 더 못내나. 이러한 참담기(式), 또래 오히려 무슨 정쟁때론 권위주의 시대 아닌 민주화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현상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정쟁양태의 악순환이다.

민주화는 정치의 질(質), 권력의 분산, 여당의 힘, 야당의 힘, 정치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경우 우리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갑도양한 민주화 시대 여당과 민주화 시대 야당으로 바뀌었

을 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입지로 깨고, 농성하고, 몸싸움하고, 비정치로 단속처리하고... 하는 그 일면이 그날 그대로 있다. 이 저주스러운 숙명을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야 할 지 방도를 찾을 수 없다. 여당은 여당권을 들어 야당을 쇠멸해야 한다는가, 또는 반대로 야당권을 들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야당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우리 정치의 질적(質的) 퇴락(退落) 퇴락(退落)은 그런 미시적인 시시비비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난 것 같다.

무언가 거대하고 다양한 피맛들이 우리 정치와 정계와 정치인들을 휘어잡고 있어서, 일단 그 피맛들에 감기면 누구나 그런 막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만 같다. 이 피맛들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정치의 ‘그 모양 그 모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냉정해지는 일이다. 이것은 허무주의적 정치 무관심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냉정(冷靜)의 정치란 대당하는 현실극복의 의지현미(意志顯微)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철저한 정쟁의 악순환(惡循環)을 끊어야 한다. 희망은 여성적으로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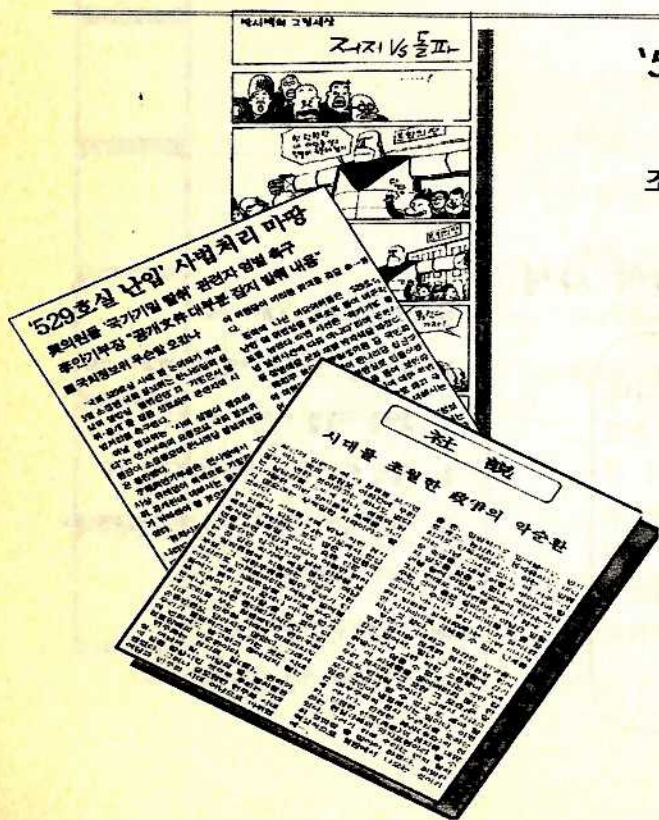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큼 여당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노골화했다. 기사 분량이나, 편집, 논조 모두 여권에 우호적이었다. 1월 6일자의 <529호실 난입 사법처리 마땅>이라는 제목을 비롯하여 여권의 법안 변칙처리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7일 이후에는 ‘529호 사태’ 관련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계속된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여, 속전속결 전략 가속도>, <정치복원시도, 야 달래기>, <여, 대화 선물 찾기 고심> 등 주로 여당의 입장에서 제목을 달았다.

최근 대한매일이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에 대한 보도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보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당 편들기 일변도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소유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529 사태' 관련 신문보도 비평

1/6 ~ 1/16

조선.중앙.대한매일.동아.한겨레.한국



동아, 한겨레, 한국일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정치사찰에 무게를 두며 안기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월 7일자 사설 <안기부가 서야 할 곳>에서 한나라당의 강제진입과 문건 공개를 옹지 않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들 문서에는 안기부의 집무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관행과 제도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안기부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안기부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보다 좀 더 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겨레는 1월 8일자 데스크칼럼 [안기부 국회서 나가라]를 통해 “DJ 정부가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과신함으로써 우를 범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 16일자에서도 여당의 “한나라당의 때묻은 과거에 기댄 도덕적 자만심”을 질타하며 “권력이 타성에 휩쓸리는 순간 여권은 눈과 귀가 멀다”고 상기 키시고 있다.

한국일보도 1월 7일자 사설 [정보활동 범위 정면 논의]를 통해 “문건의 정보 내용들이 어떻게 보고되고, 또 활용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짚으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 일반기사에 서는 정치권의 공방이 부각, 초점 흐리기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안기부 ‘정치사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위기모면용 정치공세와 변명에 급급한 구태를 보인 여당의 ‘정치적’ 해결로 일단락 되었다. 진실을 알고자했던 국민들에게 언론보도는 태부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뿌리인 이전 정권 하에서 자행된 정치사찰 등 모든 종류의 ‘사찰’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소하는 계기로 여론조성을 해야 옳다. 또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정치공세를 펴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설득력 있는 해명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구태를 반복한 여당에 대해 각 비판의 잣대를 달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지난 1월 24일 마산에서 개최되었던 한나라당 집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집회를 주도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이 IMF 이후 대규모 공단 밀집 지역인 영남지방이 겪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불안한 민심을 이용, 지역차별론을 부추기는 각종 유언비어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물론 여당 역시 대화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데다, 단독 개최한 청문회 역시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큼 부실한 점 등은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조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며, 이것이 한나라당의 행태가 좀 더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되어 조선일보가 유언비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문제를 부각,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또 대부분의 언론에선 한나라당과 여당의 갈등, 각 정당의 입장만을 보도하기에 급급하여, 경제 환란에 가장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감정 부추기기 열중한 조선일보

지역감정 조장에 가장 적극적인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기사분량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균형 있게 기사로 실었다. 그러나 야당위원들의 지역감정 조장발언과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우려’라는 입장을 기사로 실는 가운데, 또 다시 유언비어를 반복 기술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언비어의 내용을 반복전달하고 있을 뿐이며, 그에 대한 검증은 하거나 여당의 반발을 기사화 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

'529호실 난입' 사법처리 마땅
翼의원들 '국가기밀 탈취' 관련자 엄벌 촉구
李안기부장 "공개文件 대부분 잡지 발취 내용"

■국회정보위 무슨말 오갔나

“국회 529호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정보위 열람실 ‘물범진입’과 ‘기밀문서 탈취·공개’를 집중 심토하며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정보위는 ‘사태 설명이 필요하다’는 안기부측의 요청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이 소집했으며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李福源안기부장은 인사말에서 ‘의정 사상 유례없이 폭력으로 기밀문서를 탈취·공개한데 대해서는 중본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입을 열었다.

정치사찰’부분과 관련, 추부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져가 공개한 문건은 대부분 신문·잡지에서 발취한 수문으로 밀착간시를 하는 상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안기부도 국가전담차원에서 정치일반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부장은 그러나 “정보위에서 얻어진 것은 정보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태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 이

야 위원들이 버리를 맞대줄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 나선 여당의원들은 529호실 난입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들며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에 다름 아니다”라며 “관련자를 엄벌해줄 것과 재발 방지책을 따졌다.”

韓和甲 林福源 李福源의원 등 국회의 의원들은 529호실이 한나라당 집권당인 지난 84년 정보위 열람실로 만들어졌고, 96년 국회예산 2억원을 들여 보안장치까지 한 곳이라며 529호실에 대한 최법성을 주장했다. 이를 불법적으로 따피, 국가기밀 본건을 탈취·공개한데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윤주재의원 등 지린현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열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전담차원에서 보르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안기부 인력관 확보에 의 개인에모를 확대해석하거나 조작, 정치사찰로 돌아볼어는 행위는 의외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처사”라며 여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촉구했다.

●팩팩 mm0609@doeharrael.com

한나라당 마산집회 지역감정 조장 관련 보도 모니터

1·25~1·26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한겨레,한국



의 정치적 시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기사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론을 바탕으로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을 실어 일견 공정하게 보도하는 듯 했다. 또한 제목으로 "3단계 통일론 바탕 '끌어안기'"라고 뽑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의 소리에 무게 중심을 두어 극우보수세력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현란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이 북한의 두꺼운 옷을 벗기기 전에 우리의 안보 태세를 먼저 벗기고, 대북 지원이 대남공세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역햇볕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로 안보태세에 초점을 맞춰 전개했다.

한국일보의 김대중 정부 1년 평가보도는 2월 21일 <국민의 정부 1년, 환란 응급실서 투자적격 회복 실패>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2월 23일 <국민의 정부 1년, 분야별 성적표>에 이어, 2월 24일 여론조사까지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번 보도태도는 타 일간지에 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총론은 없고 각론만 있을 뿐이었다. 즉 독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DJ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없었다. 그리고, 분야별로 개별사안에 대한 나열보도로 일관해 전체적인 평가를 독자가 내리는데 있어 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았다.

2월 21일 <4대 개혁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4대 개혁과제로 금융·재벌·노동·공공부문을 선정해 그 성과와 한계 등을 전개하고 있고, 2월 23일 <국민의 정부 1년, 분야별 성적표>에서는 국정 1년을 남북관계, 안보, 외교, 노사관계, 정국운영, 인사, 문화, 여성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자체적으로 성적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 지적에 그치고 날카로운 비판과 비전 제시까지 나아가지 않아 노력

에 비하면 헛고생한 셈이 되었다. 한편 한국의 가장 문제 있는 기사로 지적된 것은 2월 24일 5면 <영·호남 편차 컸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여론조사결과로 실은 제목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현재 지역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제목을 달 필요가 있는지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일보는 따로 기획물을 신지 않은 대신 2월 24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에 의해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는 제목으로 <"정치개혁 공감" 78.1%> 달았고, 23가지 항목을 나눠 '국민의 정부' 1년을 업적 평가한 표를 신기도 했다.

중앙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보도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지면에 실는 과정에서는 중앙만의 논지가 엮보이기도 했다. 이날 3면에 여론조사 해설기사의 부제를 <"정치분야 개선 필요" 분위기 반영, "2與공조 마찰 있을 것" 75.6%>로 달아 여야갈등을 부각시키는 점, 같은 면 사이드 box <해외서 본 김대통령 1년> 기사에서 역시 부제로 <내각제 개헌 논란·2與해법에 촉각>으로 달아 일본측만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사례로 지적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실·칼럼은 분량이 많았지만, 동아일보 자체의 기획물이나 기사는 찾기가 힘들었다.

사실 및 칼럼은 2월25일 사실 <'큰 정치'를 하라>, 같은 날 데스크 칼럼 <DJ 노믹스 1년 성적은...>, 3월 1일 김용정 논설위원의 <DJ경제개혁의 걸림돌> 등 3편이나 되었으나, 보도물로는 시민단체 개혁 평가토론회를 중계·해설한 2월 23일 5면 box <"DJ 1년 '실적 올리기식 개혁' 급급">기사와 외국기관의 입을 빌어 중계 평가보도하고 있는 2월 24일 3면

box <'DJ정부 1년' 외국평가>기사가 그 예로 뽑힐 정도였다. 물론 2월 27일에는 김대통령 취임1주년 리더십 점검 기획기사가 실렸지만 1년 평가보도로 보기에는 미흡했다.

이는 동아가 자기색깔을 충실히 나타내고 싶다는 욕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지면에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자칫 공허해 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월 27일 김대통령 취임1주년 리더십 점검 기획기사는 "취임 1년을 맞아 국정운영이 난맥상으로 빠졌다"며 그 원인으로 "혼자 뛰는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리더십을 하단에 실고 있는데 "자과 철저히 챙기고 권위주의적... '3김'과 유사"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기사는 리더십이라는 의제에 여야 총재 양자의 비교라는 점에서만은 참신한 바가 없지 않았다.

한겨레는 2월 20일부터 시작해 24일까지 총 5편에 걸친 시리즈물로 김대중 정부 1년을 평가 보도했다. 의제는 개혁패러다임, 정치 리더십과 퍼스널리티, 인사와 사정스타일, 경제·재벌·노동정책, 남북관계·통일정책 등 5가지였는데 의제설정의 적절함은 다른 일간지에 비해 돋보였다는 것이 모니터 요원들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왜 굳이 YS 정권과 비교하는 기획이었는데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겨레의 기획이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양감을 지면에 함께 올리는 것만으로도 약발이 먹힌다는 우리언론의 구태의연한 보도 행태를 보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웠다.

한편 2월 25일 한겨레시평에 실린 강원대 이병천 교수의 칼럼 <김대중 정부 1년, 국민의 소리>은 김대중 정부 1년 평가와 관련된 각 일간지의 사실·칼럼에서 가장 돋보였다.

대한매일의 보도태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

든 기사와 칼럼에서 정부의 시각을 일관되게 대변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한해 평가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회의 당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정도로 호의적인 보도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최근 김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때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홍보가 부족하면 정책의 실효성도 반감하고 그 틈을 탄 역선포도 있을 수 있다며 국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며 전 국무위원회에 지시한 것이다. 상상이 지나칠 수도 있으나 대한매일의 이번 보도는 이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오해

**구조조정 성공적- 금융개혁은 불안 美골드만삭스
개혁실패- 5대재벌에 경제력 더 집중 美일견연구소
경제지표 좋아졌지만 서민고통 심각 日아시아신문**

'DJ정부 1년' 외국평가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23개 항목을 분석해 금융불안지수(1~24점이며 낮을수록 안정)를 작성한 결과 한국은 11점, 의원외국지정보다 안정된 것이지만 필리핀(9점)보다도 불안하다. 한국에서는 은행이 여전히 정부의 개입은 너무나 부러가 있어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선 금융구조조

결과점에서 국유화시킨 은행의 무능리한 임직원들을 파감하게 정리하고 외국은행의 우수한 경영진이 나뉘어있는 총재를 기용해야 한다. HSBC나 GE 캐피탈과 같은 세계적인 유수은행들에 국유화된 은행을 맡아 경영하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미국의 구조개혁은 실패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한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개혁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5대 재벌의 힘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그들이 자본을 '싸움'에 경쟁체제는 현저히 약화되고 경쟁 집중은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 파산을 피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기업개혁은 재벌의 가족지배를

아시아국가 금융불안지수

국	가	97년 9월	97년 11월	98년 1월	98년 3월
한국	18	22	10	11	
일본	7	7	4		
중국	8	8	4		
필리핀	13	14	9		
말레이시아	15	15	11	11	
인도네시아	15	20	18	18	
태국	22	22	13	13	

주: 지수는 1~24이며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 (자료: 골드만 삭스)

안고 있는 최대과제라 하나다. 김대통령은 "시장원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강력히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업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 경제고용지수는 연간 평균 8.75%로 8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인 5백2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제도 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김대중 정권의 개혁노력을 평가해 한국의 신용도를 거의 1년만에 높였다. <신치영기자·워싱턴·도쿄=홍은배·김순환특파원> euntack@donga.com

를 살 정도였다.

먼저 대한매일은 기획기사로 <국민의 정부 국난 극복 1년>이라는 제목 아래 2월 19일부터 26일에 걸쳐 4회 연재 보도했다. 제목과 부제만 보더라도 대한매일의 기획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해외 인용 보도-자사이익에 따라 들쭉날쭉 동아·대한매일·중앙이 가장 심각해

한편 해외인용보도에 있어선 각 일간지들은 자사이익에 따라 취사선택해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객관적 평가자료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 김대중 정부 1년 평가가 공정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동아일보 2월 24일 3면 box <‘DJ정부 1년’ 외국 평가>기사는 외국기관의 입을 빌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개가 부정적인 평가일 뿐이었다. 제목만 보

더라도 “구조조정 성공적... 금융개혁은 불안” “개혁실패...5대제벌에 경제력 더 집중”, “경제지표 좋아졌지만 서민고통 심각” 등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어떠한 해설도 없이 바로 외국 기관 평가를 시작해 모니터 요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기사에서 언급된 3개의 외국평가기관이 어떤 과정으로 선정되어 기사에 실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대한매일의 2월 24일 3면에 실린 <외국언론이 본 ‘DJ집권1년’> 기사와 잘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기사는 제목은 “일본도 못한 경제개혁 해냈다”이다. 기사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코멘트를 중계보도 하면서 “김정권은 ..금융위기를 말끔히 극복했다”, “지난 1년간 김 대통령의 강

력한 지도력이 두드러졌다”, “김대통령에게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 라는 등 극히 호의적인 보도 내용만을 중계보도 해 동아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2월 24일 3면 <해외서 본 김대통령 1년> 기사에서 해외시각을 경제분야·대북정책·외교 및 내정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어 타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으로는 “환란 극복 후한 점수...빅딜 정부 개입 우려”로 달아 제목에서 자사의 입장(자본 편향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즉 정작 기사에는 빅딜에 대한 우려는 미국만이 보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도 못한 경제개혁 해냈다”

■ 외국언론이 본 ‘DJ집권1년’

1 위싱턴 도쿄 崔哲昊·黃性漢과 1 세계 각국 언론들은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집 혹은 해설기사들을 통해 한국의 개혁, 경제난 극복노력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 정부 1년을 맞아 23일 일제히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통화위기 속에 탄생한 김정권은 경제개혁과 해외지원으로 외화부족을 해소하고 국제신용도도 회복하는 등 금융위기를 말끔히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장권유적을 통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해온 재벌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강권발동’도 봉사하는 단호한 재벌개혁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국내에서는 재벌개혁,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과거 청산” 등 지난 1년간 金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프랑스 유력지들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개혁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르피가로는 “한국이 경제위기라는 터널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면서 “金대통령에게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한국정부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활력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은행들이 아직 개혁과정의 위험요인으로 잠복해 있다”고 충고했다. 홍콩의 아시안 위스트리트 저널(A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金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은 권위주의와 독재에 허덕여온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hay@daehanmaeil.com

6·3 재선거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예정이었던 고승덕 변호사의 출마 포기는 정치철세의 전형으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여파로 ‘노사정 위상강화법안’, ‘정부조직법안’ 등의 중요사안을 여당이 변칙 처리하는 결과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올바른 시각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정확한 시비를 가려야 할 언론이 이 사건을 ‘사위와 장인의 대결’과 ‘김중 안된 협박설’ 등의 흥미 위주로 다뤄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파문

또한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당론을 어기고 여당의 법안통과에 협조한 한나라당의 이수인, 이미경 의원에 대해서도 언론은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정치도덕적 시각을 강조, 두 정치인의 ‘의도’를 의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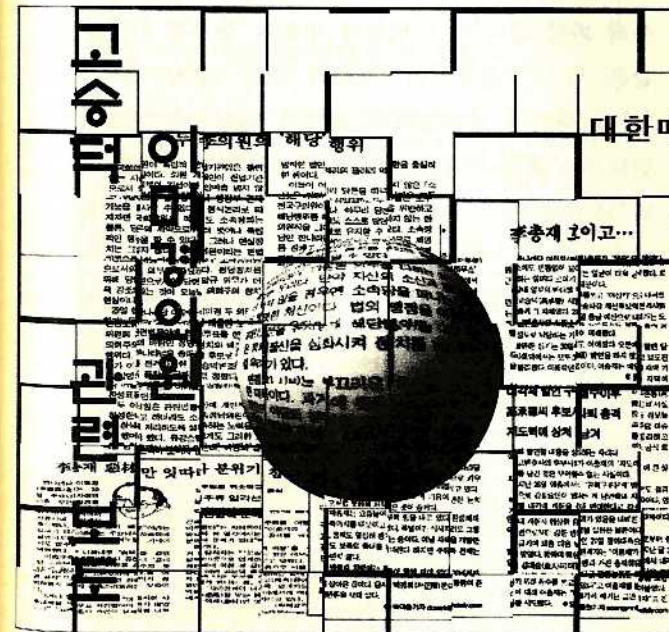
‘정당정치의 체질개선’을 위한 보도 아쉬워

고씨 사퇴파문과 관련한 신문보도는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색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4월 30일자 <고승덕 코미디>라는 사설에서 “공인의 처신으로는 심히 불쌍사나운 추태였다,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경망스러운 행동이었다”며 밀실공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것을 두고 그가 협박에 시달렸다는 투의 논평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진상을 알 길이 없지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그런 협박과 번복이 끝날 있었다”라고 했다. 이는 고씨의 사퇴에 ‘여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오용한 것으로 밀실공천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근시안적 접근이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

고승덕 사퇴파문과 이미경, 이수인 의원사건 보도 보도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